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2022. **8.16.**(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정책위원회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 :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 목 적

- 역대급 자초위난 정권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권력다툼에만 몰두하며 집권당의 책무를 포기한 무능한 여당의 실정을 정리하고 평가
- 국정무능이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분야별로 진단
- 당·정·대 위기대응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 위기에 대응할 민주당의 추진과제 도출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2년 8월 16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306호(정책위원회 회의실)

● 진 행

구 분	시 간	패널 및 주요내용
		사회 : 김은옥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축 사	14:00~14:10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사말		노응래 민주연구원장
		좌장 : 김성주 국회의원
발제 및 토론	14:10~15:50	·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보고 ·
		발제 : 전희락 부원장(민주연구원)
		· 경 제 ·
		발제 : 최배근 교수(건국대) 토론 : 이동주 국회의원
		· 외교안보 ·
		발제 : 김준형 교수(한동대) 토론 : 김영배 국회의원
		· 교 육 ·
발제 : 김성천 교수(한국교원대) 토론 : 강민정 국회의원		
		· 인 사 ·
		발제 : 박용수 전문연구원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토론 : 오영환 국회의원



인사말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장 노웅래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그토록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은 윤석열정부의 시작이자 5년을 가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 늦게 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석열정부 100일 동안 국민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윤석열정부 100일, 국민이 경험한 것은 민생파탄, 권력사유화, 공정파괴, 안보불안, 뜬금정책 등 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100일 내내 실망, 우려, 걱정만 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파탄지경인 민생문제에 유능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 환율, 금리가 치솟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삶이 무너지고 있지만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100일 동안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적 인연과 극우 인사로 대통령실을 사유화하고, 검찰을 앞세워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지난 정부에 대한 보복수사 하려는 것 말고는 다른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 불법과 탈법 인사들을 공직에 임명하면서도 오히려 전 정부보다 훌륭한 인사들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존, 안전과 직결된 북한문제와 외교안보 정책에서 그 어떤 비전이나 방향성도 제시하지 않은 채 우왕좌왕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5세 입학정책, 경찰국 설치처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정책을 충분한 논의나 국민적 합의 없이 뜬금없이 막 던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나라 걱정보다 국민들의 대통령 걱정이 더 큼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국정지지율이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반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집권여당은 당내 권력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야당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바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견제함과 동시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오늘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귀한 자리 좌장을 맡아주신 김성주 의원님, 발제를 맡아주신 최배근 교수님, 김준형 교수님, 김성천 교수님, 박용수 박사님, 토론을 맡아주신 이동주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오영환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될 윤석열정부 평가, 그에 대한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의견들은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6일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Contents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 :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보고

전 희 락 부원장(민주연구원)	5
------------------	---

경 제

발제 국정운영은 시대과제를 담은 철학과 실력이 결정, 윤석열정부 100일 경제 예고된 실패!	23
최 배 근 교수(건국대)	
토론 이 동 주 국회의원	41

외교안보

발제 윤석열 정권 100일 외교안보 평가	47
김 준 형 교수(한동대)	
토론 김 영 배 국회의원	55

교 육

발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진단과 제언	61
김 성 천 교수(한국교원대)	
토론 강 민 정 국회의원	71



Contents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 :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인 사

발제 윤석열 정부 임기초 조각단계 인사방식 특성 검토

-검찰국가 시스템 구축 측면을 중심으로-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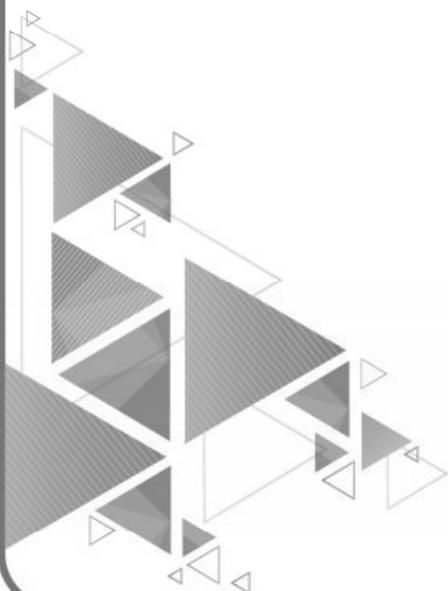
박 용 수 전임연구원(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토론 오 영 환 국회의원 96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보고

전 희 락 부원장(민주연구원)



尹정부 출범 100일, 국민 평가 여론조사

2022년 8월 16일

민주연구원

1. 조사 설계

구분	내용
모 집 단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 1,028명 (무선 1,016명, 유선 12명)
표본오차	· ±3.0%포인트 (95% 신뢰수준)
표집방법	· 2022년 07월 말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 유·무선 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 행정안전부 07월 말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림가중)
응답률	· 무선 5.4%, 유선 8.8%
조사기간	· 2022년 8월 10~11일 (2일간)
조사기관	· (주)조원씨앤아이

	사례수(명) 비율(%)	
	1,028	100.0
전체		
서울	195	19.0
인천·경기	326	31.7
강원	31	3.0
권역별		
대전·세종·충청	109	10.6
광주·전라	99	9.6
대구·경북	101	9.8
부산·울산·경남	155	15.1
제주	12	1.2
연령대별		
18~29세	174	16.9
30대	157	15.3
40대	189	18.4
50대	199	19.4
60세	169	16.4
70대 이상	140	13.6
성별		
남성	510	49.6
여성	518	50.4

1.尹정부 국정운영 평가



◆총체적 부정 평가

✓ 긍정 평가 28.2% 對 부정 평가 67.8%

◆지지기반 무너져

✓ 보수층도 22.3%가 '매우 잘못한다'고 부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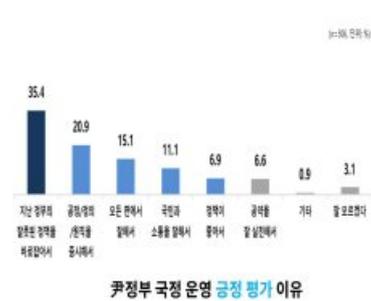
✓ 수도권 부정평가는 전국 평균(서울 68.2%, 인천경기 75.3%)을 상회한 수준임.

✓ TK(긍정 vs. 부정 = 49.1%:45.3%)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50% 이상임.

✓ 지난 대선 때尹투표자 중 42.4%가 부정 평가

전체 응답자 中 '매우 긍정' 평가 8.4%인 반면, '매우 부정' 평가 49.9%로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 강도가 매우 강한 상황임.

1-1.尹정부 국정운영 긍정 및 부정 평가 이유



◆긍정평가 이유

✓ '尹정부 잘못된 정책 바로잡아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35.4%(전체 中10.5%)임.

✓ 현재 불거진 '인사 논란', '김건희 여사 논문위조' 등 부정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공정·정의·원칙' 때문에 지지한다는 응답이 20.9% (전체 中 6.2%)로, 이는尹 정부에 대한 무조건 신뢰층 존재를 보여줌.

✓ 무조건 신뢰층에게 '정책'은 중요한 평가 기준이 아님.



◆부정평가 이유

✓ '모든 면을 잘 못해서'(41.9%(전체 中 29.4%)), '신중하지 않은 대통령의 말과 태도'(14.7%(전체 中 10.3%)) 응답자에게尹 정부 부정 평가의 근본적 원인은尹 대통령의言行과 태도임(감성적 평가).

✓ 부정평가 국민에게는 '민생정책', '인사정책' 등 행정 능력도 중요한 평가 기준임(이성적 평가).

1-2.尹대통령 리더십 위기의 근본 원인



- ✓尹대통령 국정운영 태도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60.2%가 '진지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반면, '진지하다'는 응답은 38.1%임.
- ✓'매우 진지하지 않다'(32.4%)는 응답이 '매우 진지하다'(13.6%)는 응답의 약 2.5배임.
- ✓권역별로 서울, 경기, 호남, PK에서,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경제활동인구)에서, 성별은 남녀 모두 '진지하지 못하다'는 '진지하다'는 응답보다 크게 앞섬.

응답자는尹정부 국정운영 부정평가 근본적 요인을尹대통령의 국정운영 태도에 귀인하고 있음.

2. 국민 삶에 미친尹정부 국정 영향 평가



- ✓이전과 '동일하다'(66.4%)는 응답이 압도적인 가운데, '악화됐다'(28.2%)는 응답이 '호전됐다' (5.0%)의 5.6배임.
- ✓연령별로 '악화됐다'는 응답은 40대(37.3%), 50대(35.5%), 60대(28.2%), 30대(26.2%) 순으로 나타남. 20대는 '악화됐다'는 응답이 16.4%(동일 82.3%, 호전 1.3%)임.
- ✓진보층은 42.5%로 '악화됐다'가 다른 이념층(중도 28.8%, 보수 15.6%)보다 높음. 중도층/보수층은 '동일하다'는 평가가 67.5%와 73.0%로 높게 나옴.

아직은 이전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66.4%임에도尹정부 부정적 국정 운영 평가가 67.8%임.

향후,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현재, 부채가구는 전체 가구 중 63.6%임)으로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면,尹정부 부정 평가는 고착화되거나 긍정 평가가 하방할 개연성이 매우 높음.

3. 尹정부 민생/경제 영역 평가



✓ 尹정부 민생/경제 영역 평가(잘못함 67.4% vs. 잘함 28.2%)는 尹정부 국정운영 평가(잘못함 67.8% vs. 잘함 28.2%)와 매우 흡사한 양태임.

민생경제 평가 : 매우 잘못함 42.1% / 매우 잘함 5.2%

국정운영 평가 : 매우 잘못함 49.9% / 매우 잘함 8.4%

✓ 대구·경북만 절반(50.7%)이 '잘한다'고 평가.

✓ 연령대별로 50대 이하는 70% 이상이 '잘못한다'고 평가한 반면, 70대 이상은 39.2%만 '잘못한다'고 평가하여, 연령별 평가 차이를 보임.

민생/경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 평가기준임. 尹정부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민생경제 정책 실패가 가장 근본적 원인임

3-1. 尹정부 민생/경제 긍정 평가 이유



✓ '다주택자 부동산 과세 완화'(18.5%), '건축재정을 위한 정부지출 축소'(14.7%), '소득세 인하'(14.3%), '법인세 감세'(12.5%) 등 1위, 2위, 3위, 5위의 긍정평가 정책 모두 지난 정부 지우기 정책임.

尹정부가 민생정책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반증임.

3-2. 尹정부 민생/경제 부정 평가 이유

(n= 73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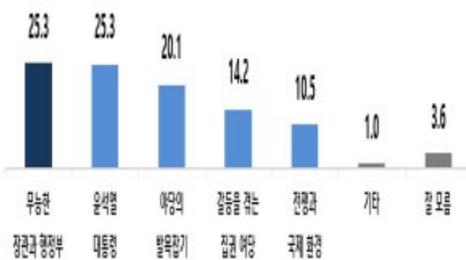


- ✓ '모든 민생 경제 정책'(33.8%), '민생/물가대책'(21.5%), '법인세 감세'(9.2%), '다주택자 부동산 과세 완화'(8.8%),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4.0%) 順임.
- ✓ '민생/물가 대책'은 40대(26.2%), 30대(24.9%), 20대(22.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지지 확고화를 위해서는 민생과 물가안정화 **대안정책 제시와 입법화** 등 실질적 조치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3-3. 尹정부 민생/경제 책임 귀인 평가

(n=1028, 단위: %)



- ✓ 국민은 **尹대통령**이 '민생/경제 정책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평가함.
- ✓ '야당의 발목잡기'(20.1%)가 원인이라는 응답은 **보수층**이면서 대선에서 **尹대통령**에게 투표한 **무조건적 신뢰층**임.
- ✓ 지역별로 1순위가 달라짐. 서울은 '무능한 장관과 행정부'(25.5%)를, 인천·경기는 '尹대통령'(30.2%)을, 충청/TK는 '야당 발목잡기'(29.4%와 27.9%) 1순위 책임요소로 평가함

- ✓ 세대별로도 1순위가 달라짐. 20대는 '여당의 갈등'을, 30대는 '무능한 장관과 행정부'를, 40대와 50대는 '尹대통령'을, 그리고 60대 이상은 '야당 발목잡기'를 1순위 책임요소로 평가함. 30대 역시 20대와 마찬가지로 '여당의 갈등'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함.

전통적 지역별/세대별 지지 기반이 귀인 평가의 한 요인. 국민의힘 내홍 상황 이슈에 빠지지 말고, 2030 지지 확보를 위해 민주당은 **청년 정책에 집중할 때**.

4.尹정부 인사정책 평가



✓ '잘못함'은 74.6%, '잘함'은 21.9%로尹정부 인사 평가는 매우 부정적임. 특히 '매우 잘못함'이 49.5%로 인적쇄신 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임.

✓ 모든 권역의 60%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함. 특히 호남(88.1%), 인천/경기(80.9%), PK(79.2%), 서울(73.6%)에서 부정 평가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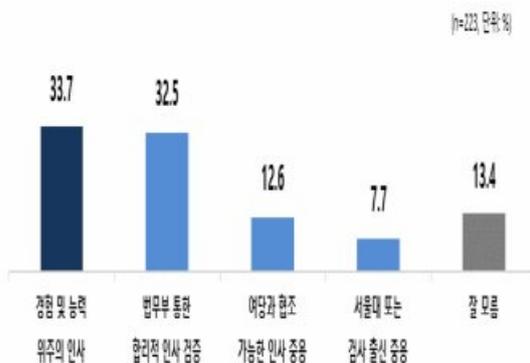
✓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는 50%를 상회함.

✓ 대선에서尹후보 투표자 중 55.9%가 부정 평가함.

✓ 세대별, 지역별, 이념별로 구분된 모든 집단 응답자 50% 이상이尹정부 인사정책을 부정 평가함.

보건복지부장관, 검찰총장 후보추천 지연, 교육부 장관 사퇴, 대통령실 인사 사적 채용, 건진법사 인사개입 의혹 등의 인사 난맥의 영향으로 사려됨. 인사가 완료되면 부정 평가요인이 상쇄될 수 있으나, 정책 추진과정의 미숙함으로 전이될 가능성 높음.

4-1.尹정부 인사정책 긍정 평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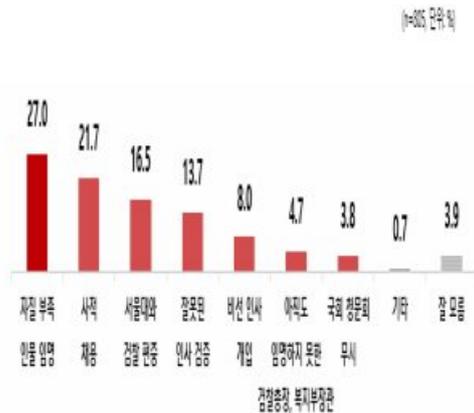
✓ 긍정 평가 응답(21.9%)는 무조건 신뢰층임.

✓ 긍정적 평가 응답자들 중, 남성은 '경험 및 능력 위주의 인사'를, 여성은 '법무부 통한 합리적 인사 검증'을 가장 높게 평가함.

✓ 이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여성 호감도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무조건 신뢰층(21.9%)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임으로 전이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 준비 안 된 한동훈 장관 비판은 한동훈 지지 강화를 야기할 것임.

4-1. 尹정부 인사정책 부정 평가 이유



✓ 부정 평가 응답은 74.6%으로 국민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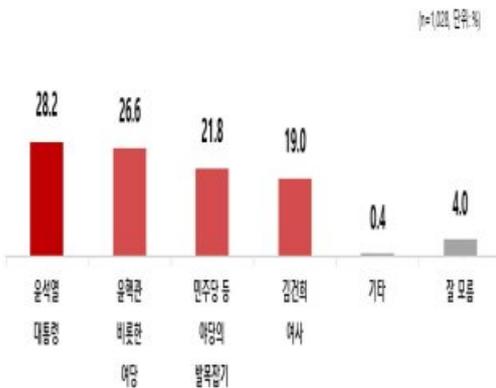
✓ '자질 부족 인물 임명'(27%), '사적 채용'(21.7%), '서울대와 검찰 편중'(16.5%), '잘못된 인사 검증'(13.7%), '비선 인사 개입'(8%) 순임

✓ 대부분 연령대가 '자질부족 인물 임명'을 부정 평가의 이유로 들지만, 30대(26.3%)는 '사적 채용'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20대(27.3%)와 40대(30.6%)도 다음 이유로 평가함.

✓ 사적 채용 이유는 '공정' 요인임

尹정부의 인사정책은 부정평가의 대표적인 **핫버튼**. 그러나 단순 비판은 '발목 잡기'로 비춰지기 때문에, **준비된 비판 또는 정책 미숙함을 비판해야 함**.

4-2. 尹정부 인사정책 실패 요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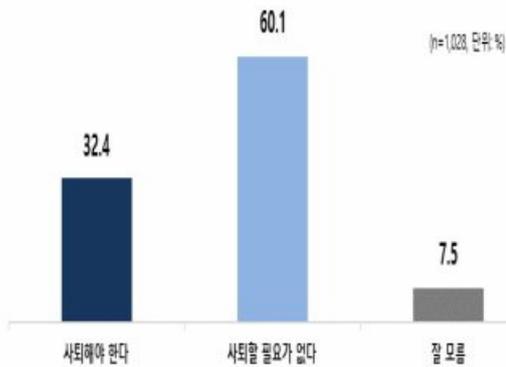
✓ 인사정책 실패 책임귀인 요소는 '尹대통령'(28.2%) '윤석열과 여당'(26.6%), '야당 발목잡기'(21.8%), '김건희 여사'(19%) 순으로 평가됨

✓ 권역별로 서울(29.1%), 인천·경기(30.7%), 호남권(35.2%), PK(27.8%)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인사 난맥의 제1원인으로 평가. 강원(33.2%), 충청권(28.6%)은 '윤석열과 여당'을, TK(39%)는 '야당 발목잡기'를 인사난맥의 제1원인으로 평가함.

✓ 연령대별 50대 이하는 '尹대통령'에, 60대는 '윤석열을 비롯한 여당'에, 70대는 '야당 발목잡기'에 책임을 귀인함.

전통적 지지 기반(지역/연령)이 책임 귀인 평가의 한 요인임.

4-3. 임기 남은 文정부 인사 사퇴 필요성 인식



- ✓ 임기 남은 文정부 기관장에 대해 '사퇴할 필요가 없다'(60.1%)는 응답이 '사퇴해야 한다'(32.4%)는 응답의 약 2배임.
- ✓ 다른 권역과 달리 충청권은 '사퇴해야 한다'(50.2%)가 '사퇴할 필요가 없다'(46.3%)보다 다소 높음.
- ✓ 모든 연령별/성별에서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우세함.

文정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한 검찰과 尹정부의 임기 남은 기관장(文정부 임명) 사퇴 압박은 비공정/내로남불로 인식되어 尹정부의 부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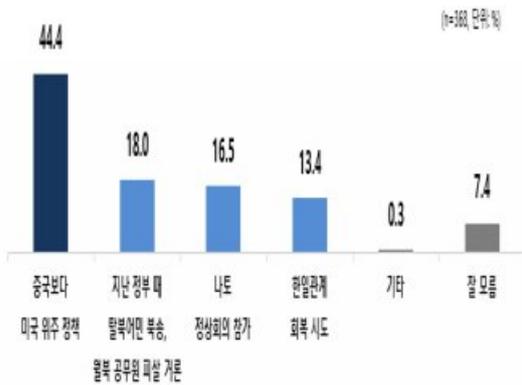
5. 尹정부 외교/통일/안보 정책 운영 평가



- ✓ 응답자 58.8%가 '잘못함'으로, 35.3%가 '잘함'으로 평가함
- ✓ '매우 잘못함'(39.2%)은 '매우 잘함'(10.3%)의 약 4배임.
- ✓ 권역별로 TK(58.6%)와 충청권(47.6%)만 '잘함'이 높고,
- ✓ 나머지 권역과 모든 연령은 '잘못함'이 '잘함'을 크게 웃돌게 평가함.
- ✓ 70대 이상(54.6%), 60대(47.0%)는 '잘함'이라 평가함.

외교/통일/안보 영역 역시, 지지기반이 평가 차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5-1.尹정부 외교통일안보 긍정 평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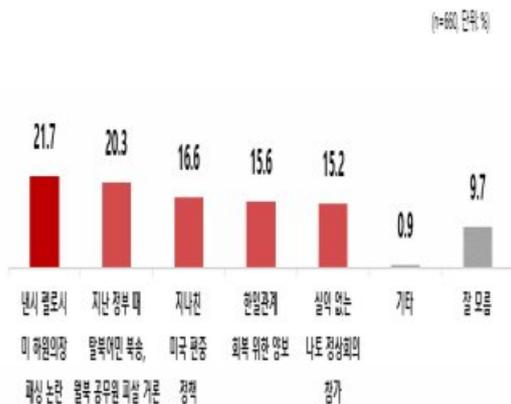
✓ 긍정평가 이유는 '중국보다 미국 위주 정책'(44.4%; 전체 中 15.7%), '지난 정부 때 탈북어민 북송, 월북 공무원 피살 거론'(18.0%; 전체 中 6.3%), '나토 정상회의 참가'(16.5%; 전체 中 5.8%), '한일관계 회복 시도'(13.4%; 전체 中 4.7%) 順으로 나타남.

✓ 40대(55.4%), 60대(39.2%), 70세 이상(43.0%) 응답자는 '중국보다 미국 위주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남성(53.3%)이 여성(36.1%)보다 '중국보다 미국 위주 정책'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 반면, 여성(24.1%)은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함.

5-2.尹정부 외교통일안보 부정평가 이유



✓ 부정 평가 이유는 '미국 하원의장 패싱 논란'(21.7%), '지난 정부 때 탈북어민 북송, 월북 공무원 피살 거론'(20.3%), '지나친 미국 편중 정책'(16.6%), '한일관계 회복 위한 양보'(15.6%), '실의 없는 나토 정상회의 참가'(15.2%) 順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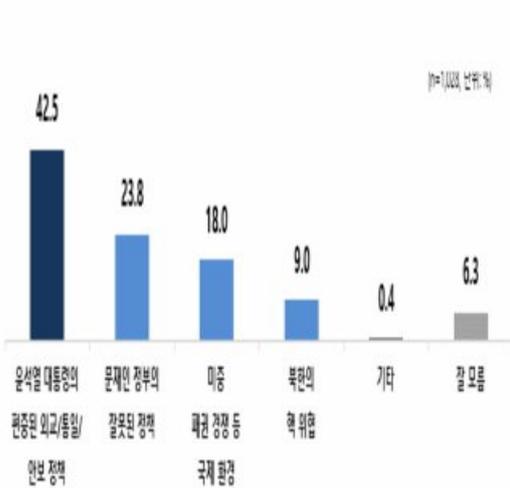
✓ 부정 평가 이유는 연령대별로 '미국 하원의장 패싱 논란' 응답이 40대 이하(20대 32.4%, 30대 33.2%, 40대 22.5%)에서 가장 높은 반면, 50대는 '지나친 미국 편중 정책'(24.3%), '지난 정부 때 탈북어민 북송, 월북 공무원 피살 거론'(24.2%) 등 順으로 나타남.

✓ 60세 이상의 경우, '지난 정부 때 탈북어민 북송, 월북 공무원 피살 거론'란 응답(60대 32.2%, 70세 이상 34.2%)이 가장 많이 나타남.

✓ 세대별 차이가 극명한 것으로 조사됨

주어진 평가 항목의 차이가 별로 없음. 이는 주어진 항목 모두가 부정 평가의 중요한 요소들임을 보여줌.

5-3.尹정부 외교통일안보 난맥 책임귀인 평가



- ✓ 응답자 42.5%가 난맥 원인을 '尹대통령의 편중된 외교/통일/안보 정책' 때문으로 응답.
- ✓ 다음은 '文정부의 잘못된 정책'(23.8%), '미중 패권 경쟁 등 국제 환경'(18.0%), '북한의 핵 위협'(9.0%) 順으로 원인을 평가.
- ✓ 30대, 40대, 50대는 '尹대통령의 편중된 외교/통일/안보 정책'에, 반면에 70대 이상은 '文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책임 귀인함.
- ✓ 20대와 60대는 '尹대통령의 편중된 안보 등 정책' (20대 34.1%; 60대 37.2%)과 함께, '美中 패권 경쟁 등 국제 환경'(20대 29.0%; 60대 22.0%)에 동등하게 책임 귀인함.

국민은 전체적으로 국제상황 같은 외부 귀인보다 대통령 리더십과 정부 정책 같은 내부 귀인에 무겁게 책임을 묻고 있음.

6.尹대통령 신뢰도 평가



- ❖ 지난 대통령선거 때와 비교한尹대통령의 신뢰도 평가 조사
- ✓ 응답자 74.2%가 '신뢰도가 약해졌다', 19.8%만이 '신뢰도가 강해졌다'고 응답.
- ✓ '매우 약해졌다'(54.0%)는 응답이 '매우 강해졌다'(6.6%)에 비해 47.4%P 더 많음,
- ✓ 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성별,연령대별 구분된 모든 집단에서 '약해졌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남.
- ✓ 지난 대선에서尹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 中 58%가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매우 약해졌다'(29.7%)는 응답이 가장 높음.

尹대통령에 대한 국민 실망이 매우 큰 상황임을 잘 보여준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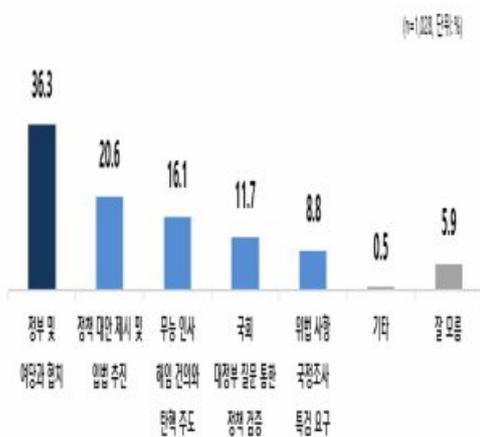
6-1. 내일 투표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까?



- ✓ 응답자 31.0%는 '이재명'을, 21.5%는 '윤석열'을 뽑겠다고 응답함. 입장 유보 23.5%.
- ✓ 연령대로 30대, 40대, 50대는 '이재명'을 뽑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60대와 70세 이상은 '윤석열'을 뽑겠다는 응답이 더 높음.
- ✓ 남성/여성 모두 '이재명'을 뽑겠다는 응답이 높음. 남성은 이재명 30.9% VS. 윤석열 17.2%, 여성은 이재명 31.1% VS. 윤석열 25.8%
- ✓ 지난 대선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尹대통령 지지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尹대통령에게 더 크게 실망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尹대통령 실망감은 높으나, **지난 투표에 대한 후회는 보류한 상황임**

7. 야당인 민주당 기대 역할 조사



- ✓ 응답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부 및 여당과 협치'(36.3%)를 요구하고 있음
- ✓ 다음으로 '정책 대안 제시 및 입법 추진'(20.6%), '무능 인사 해임 건의와 탄핵 주도'(16.1%), '국회 대정부 질문 통한 정책 검증'(11.7%), '위법 사항 국정조사 특검 요구'(8.8%) 순으로 나타남.
- ✓ 30대 이상에는 '협치' 응답이 가장 높음. 60대(48.3%)와 70대 이상(55.8%)은 타 연령층보다 더 높게 '협치'를 요구함.
- ✓ 20대는 '정책 대안제시 및 입법 추진'(23.7%), 과 '무능 인사 해임 건의와 탄핵 주도'(23.7%) 등 야당의 구체적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함.

協治 중시 속에, **대안 제시와 입법** 주도로 **대안정당 이미지 확보**가 관건임

결론 및 제언

1. 정세 전망

- ☞尹정부의 국정 긍정 평가의 상승 반전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우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음.
- ☞부정 평가 본질은尹대통령 리더십 리스크이며, 기대치 대비 신뢰도 하락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 ☞국민의 국정운영 최고 평가기준은 '자신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민생 정책'임.

결론 및 제언

2. 민주당 스텐스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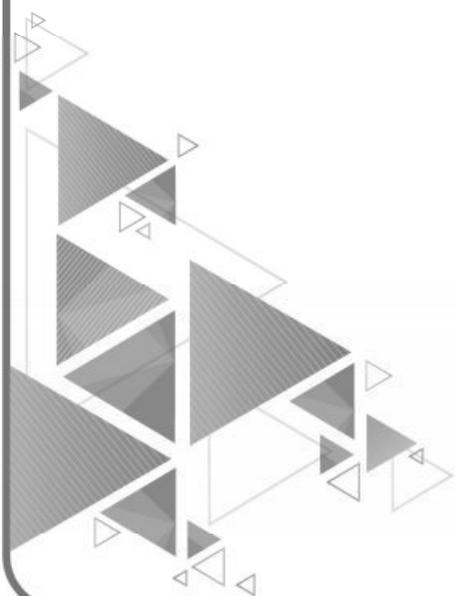
- ☞尹정부의 부정 평가의 핫버튼인 '민생/경제'와 '인사' 이슈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판은 필요함.
 - ☞보수성향자도 참을 수 없는 이념적 역린(한미동맹 손상), 실리적 분노(세금 등)를 자극할 수 있는 대안 정책을 트리거로 고안해,尹정부 미숙과 실수가 불거질 때, 적절한 수준에서 비판, 그 외에는 협치 모드.
 - ☞'외교/통일/안보 정책'과尹대통령의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비판하거나, 자극하면 보수 성향자가 결집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면밀한 사전 검토와 확인이 필요함.
 - ☞최우선 원칙은 '협치 모드'.
- 국민의 국정평가 최고 기준인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편파적 비판보다는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있는 민생정책 주도가 필요함.
단, 협치 모드를 벗어나면 역린할 수 있음.

대안 정당으로서의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화이팅!

감사합니다.



경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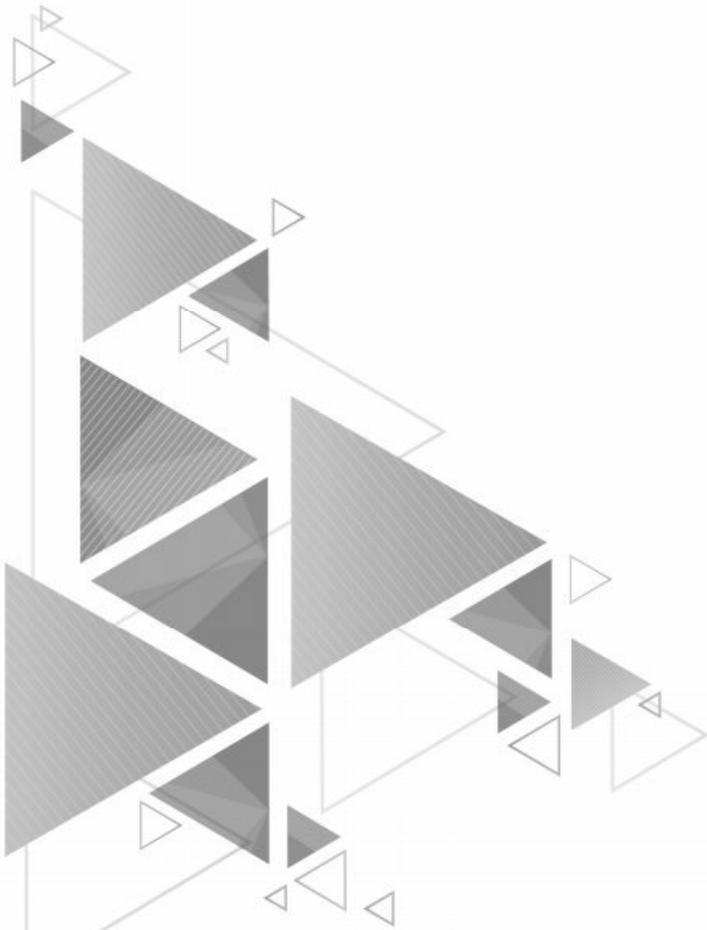




발 제

국정운영은 시대과제를 담은
철학과 실력이 결정,
윤석열정부 100일 경제 예고된 실패!

최 배 근 교수(건국대)



국정 운영은 시대 과제를 담은 철학과 실력이 결정 윤석열 정부 100일 경제 예고된 실패!

더민주,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의원회관 306호)
2022. 08. 16.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윤석열 정부의 실패: 우연이 아닌 예견된 결과>

- I. 거대한 시대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 방향 설정 실패
 - +
 - II. 낡은 사고체계와 과거회귀적 정책 대응 → 국민의 공감 획득에 실패
 - +
 - III. '잘못 낀 첫 단추'의 악순환 → 방향 수정보다 임기응변식/기우제식 대응
(방향 수정 없는 한 상황 악화 불가피)
-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고조>

'새로운 처음'형 위기의 시대와 정부 역할

- '새로운 처음'형 위기의 시대에 대한 인식 ~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더믹 위기, 패권주의 위기, ...
- **위기 관리 역량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역량이 이 시대 정부의 핵심 역할**
- 초국가 협력의 리더십 요구(연대와 자율성과 협력 등)
- (초연결 지구촌이 등장한 21세기형 팬더믹에서 새로운 방역 문법을 제시한) 'K-방역'에 해결책 존재
-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새로운 처음'형 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우크라이나+중국 제로코로나>발 공급망 충격 인플레이 → 수요 억제식 인플레이 대책<긴축> → S 공포<이지 머니 세상의 종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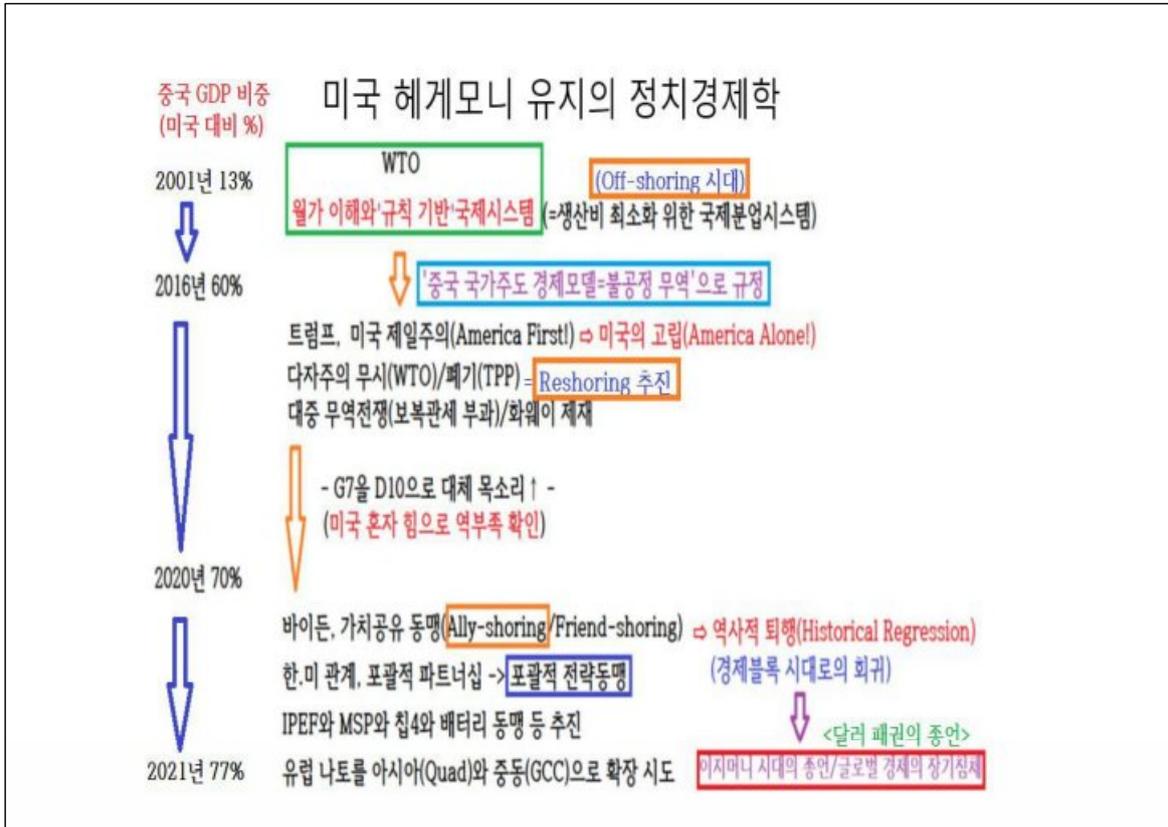
I. 시대에 대한 이해 부족: 잘못 낀 첫 단추 문제

<대외적> 미국의 패권 유지 vs. 중국 등의 질서 재편 요구가 충돌

- 문제는 절대 승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충돌은 필연적으로 '마이너스(-) 섬 게임'으로 귀결
(치킨 게임)

<대내적> 자산(가) 공화국의 붕괴

- = 부동산시장-가계부채 경착륙
- 부채 디플레이션(대차대조표 침체)으로 발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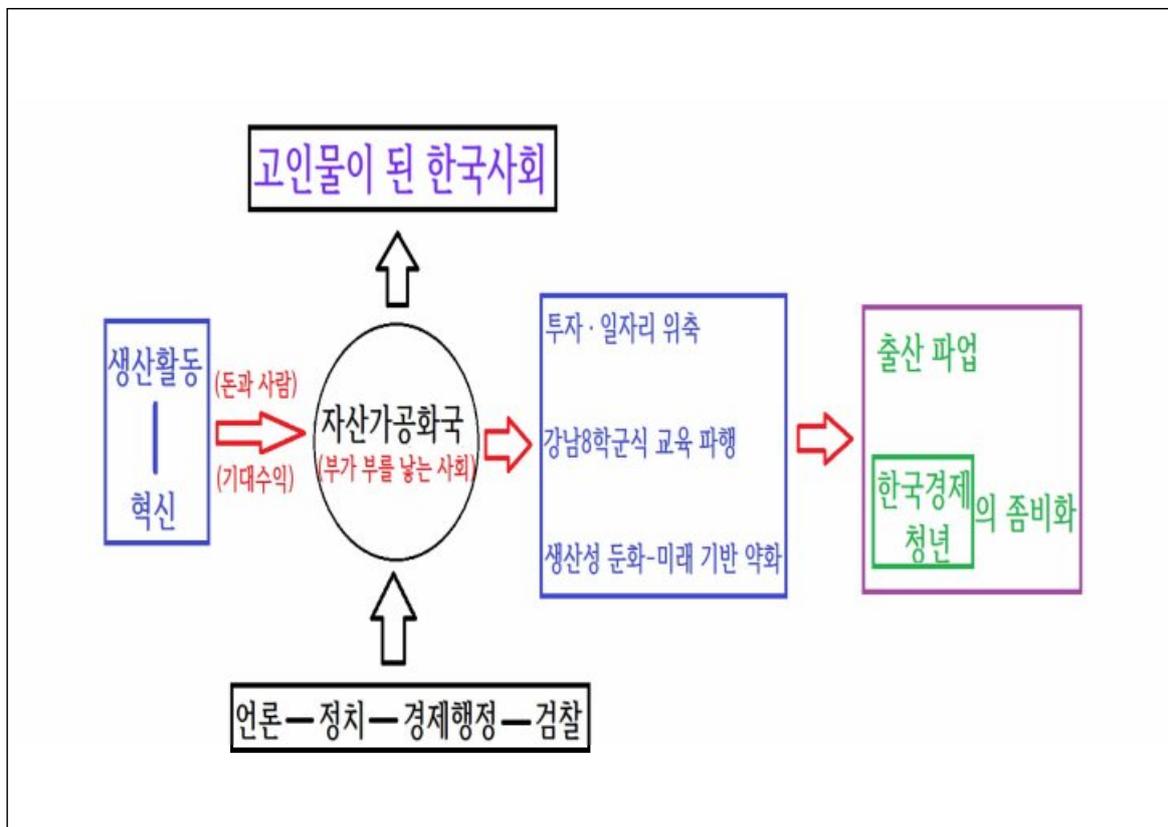


'잘못 낀 첫 단추'와 방향 설정 실패 (치킨 게임에서) 미국 패권 유지의 선봉대 역할로 방향 설정

- 2022. 5. 10. 윤석열 취임사,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2022. 5. 21. 윤석열-바이든 정상회의, 미국의 Ally-Shoring 전략에 동참
- 2022. 6. 28~29. 윤석열, (중국을 시스템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규탄한)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연설("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 연대로 보장")
- 2022. 6. 28. 최상목, 나토 정상회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이른바 '탈중국' 발언)
- 2022. 7. 1. 윤석열,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 기내에서 "어떤 국가든지 간에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존중하지 않거나 세계가 함께 지켜가야 될 가치와 규범을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땐 그에 대해 규탄하고, 함께 연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
- 2022. 8. 5. 박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中왕이 면전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용납 안돼"

2. 대통령의 잘못 된 경제철학은 위기의 단초

- 자본주의(경제적 자유 원칙)는 민주주의(정치적 자유 원칙)와 상호 보완과 균형 관계를 유지할 때 안정성 확보
- (돈의 힘<1원1표>이 지배하기에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시장은 (1인1표의) 민주주의 원칙의 산물인 선출권력에 의해 보완될 수밖에 없는데 최고의 선출권력인 대통령까지 시장 논리를 중심에 두면 **리바이던(Leviathan) 없는 혼돈과 무질서**를 유발
- 민생 위기 상황에서 (**재벌과 고액자산가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개편이나 환율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액 자산가의 포트폴리오 구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외환거래 사전신고 폐지**(신외환법 제정) 추진, (신형 공기업 민영화, 국유재산 민영화 등) **전리품 챙기기** 등이 그 산물



3. '잘못 낀 첫 단추'(미국 몰빵론)의 악순환

- '새로운 처음'형 인플레이션(**치킨게임 리스크**) → 한국 경제(기술)를 미국 안보(패권 유지)의 하위개념으로 편제(**포괄적 파트너십 →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전환**) → **중국 리스크 추가** → 무역적자 '심화'와 외환보유액 감소 그리고 **환율 리스크** → 인플레 압력 추가 및 지속 → 금리 인상 압력 증가, 그러나 부채 리스크로 소극적 금리 인상(→ **환율 리스크 지속과 인플레의 장기화 그리고 금리의 지속적 인상**)
- 부동산과 가계-자영업 중심의 부채 구조 그리고 **부동산 시장(가계부채) 경착륙 가능성 = S 공포 → D 공포 (Debt Deflation or B/S Recession)로의 진화 가능성**

6월 이후 경제지표가 빠르게 악화하는 배경 (세계 경제 리스크 + 대응 실패 리스크)의 결과

- 수출 증가율 급감(중국 수출이 주도)과 무역적자 악화
- (현재의 인플레 고통은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 한은이 조사한 지난 20년 간) 가장 높은 기대인플레이율과 소비심리 급냉
-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역자산효과
- 이자 상환부담 증가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대부분 서민(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 (침체로 진입하는 세계경제 환경으로) 수출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내수까지 악화하며 3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

6월부터 수출액 증가율 급감

수출증가율	2021	2022	수입증가율	2021	2022
1월	11.4	15.5	1월	4.1	35.8
2월	9.3	21.1	2월	14.7	25.3
3월	16.3	18.8	3월	19.0	27.8
4월	41.2	12.9	4월	34.2	18.5
5월	45.5	21.4	5월	38.2	31.9
6월	39.7	5.2	6월	40.9	19.4
7월	29.6	9.4	7월	38.2	21.8
8월	34.7		8월	44.0	
9월	16.9		9월	31.1	
10월	24.2		10월	37.7	
11월	31.9		11월	43.6	
12월	18.3		12월	37.0	

한국의 천연가스 수입액 및 수입 물량: 전체 및 러시아

	전체 수입액	전체 수입 물량	러시아 수입액	러시아 수입 물량
1월	56.9억 달러	4,999백만kg	3.9억 달러(6.8%)	320백만kg(6.4%)
2월	29.3	3,474	1.8억(6.2%)	315(9.1%)
3월	50.3	4,952	1.1억(2.2%)	191(3.9%)
4월	23.9	3,442	1.1억(4.5%)	191(5.5%)
5월	24.5	3,384	1.5억(6.0%)	245(7.2%)
6월	19.3	2,532	0(0.0%)	0(0.0%)

6월 기준, 연도별 천연가스 수입물량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6월	3,741백만kg	3,221백만kg	2,580백만kg	3,131백만kg	2,532백만kg

주: 6월 기준 2020년 수입물량은 팬데믹 충격(과 여름철 진입) 효과로 급감.



대한민국 경제, (서민에게는) 무정부 상황



변화가 보이지 않는 민주당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유-

정치실패의 결과는
장기침체와 대붕괴(a big collapse)

부가 부를 낳는 사회 대한민국 국민은 왜 노동을 해야 하는가?

가계의 소득 대 순자산 증가분 2019~21년간		국가의 소득 대 순자산 증가분 2019~21년간	
처분가능소득	96.1조원(1,059조원 → 1,155조원)	국민순소득	103조원(1,559조 → 1,662조원)
순자산	2,291조원(1.2경원 → 0.9경원)	국내순자산	3,239조원(1.98경원 → 1.66경원)
	소득 증가분의 24배		소득 증가분의 31배

부동산자산 중심의 자산 축적

19~21년간 부동산 자산 및 순자산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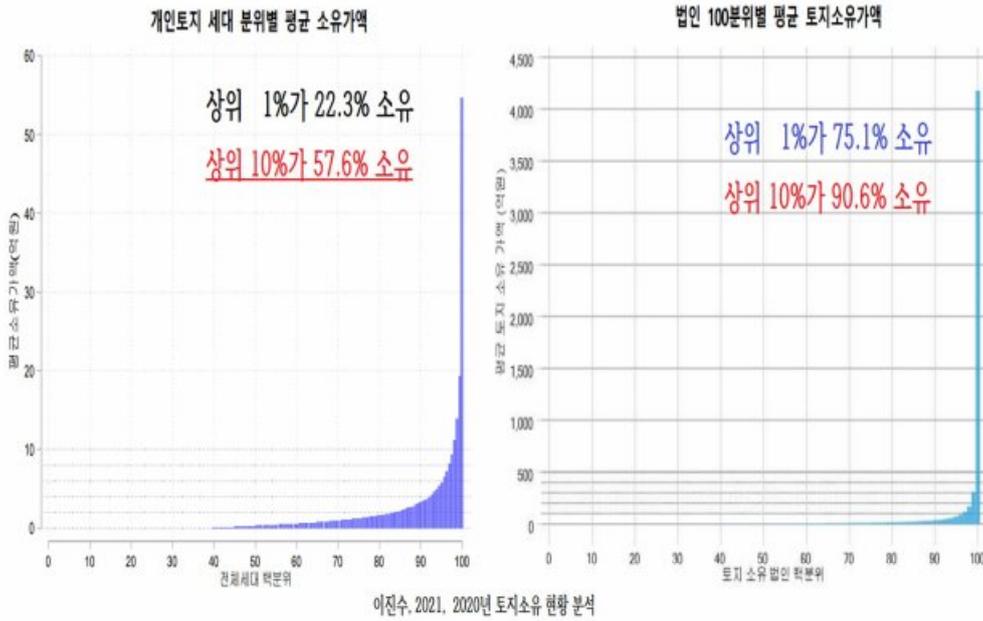
	전체	가계
부동산 자산	2,825조원 증가 (87%)	1,699조원 증가 (74%)
순자산	3,239조원 증가	2,291조원 증가

토지자산 중심의 부동산자산 축적

19~21년간 부동산 자산 및 토지자산 증가분

	전체	가계
부동산 자산	2,825조원 증가 (68%)	1,699조원 증가 (79%)
토지 자산	1,918조원 증가	1,340조원 증가

조선시대 말보다 심한 토지소유 불평등 순자산 기준 43.3%를 상위 10% 가구가 소유



피커티 계수(순자산/순소득) 가 12인 사회 금융위기 직전 미국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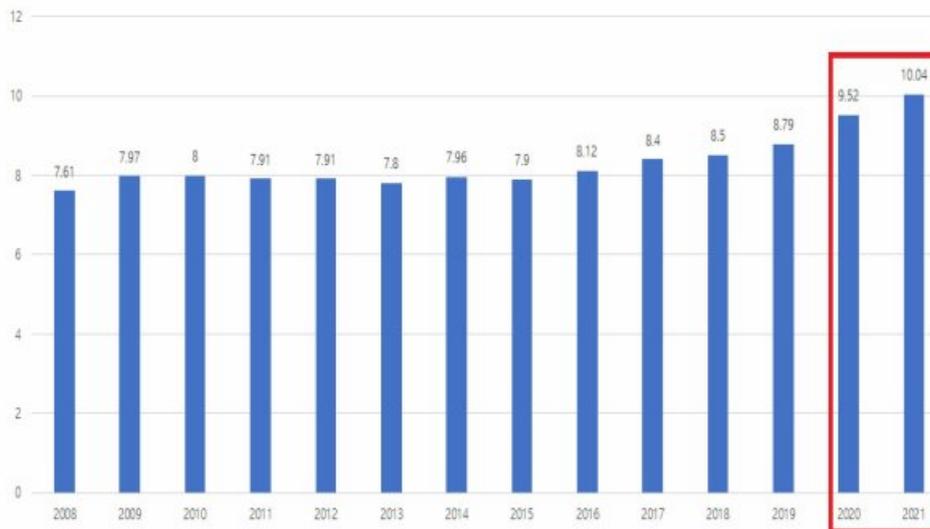


성인 1인당 (자산/소득) 배율,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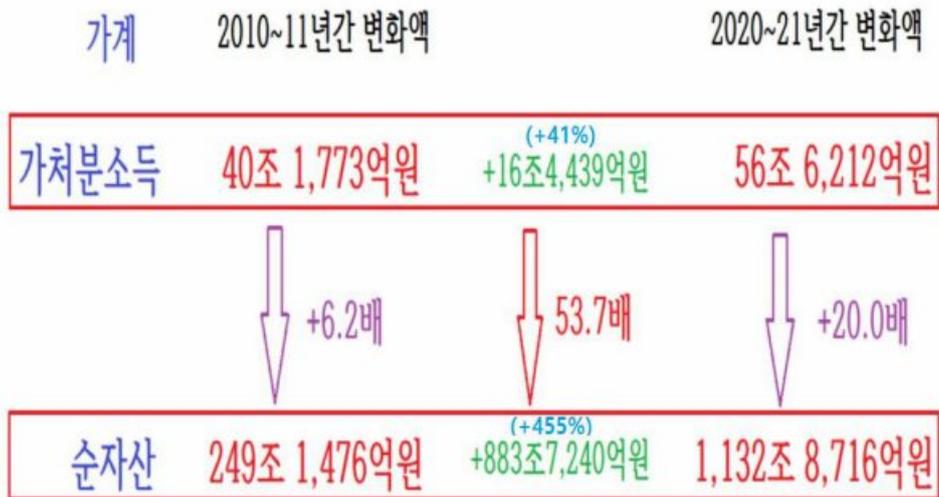
(2020년, PPP 기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영국	미국
5.8배	7.6배	5.1배	5.6배	6.2배	8.4배	5.8배	5.7배	5.3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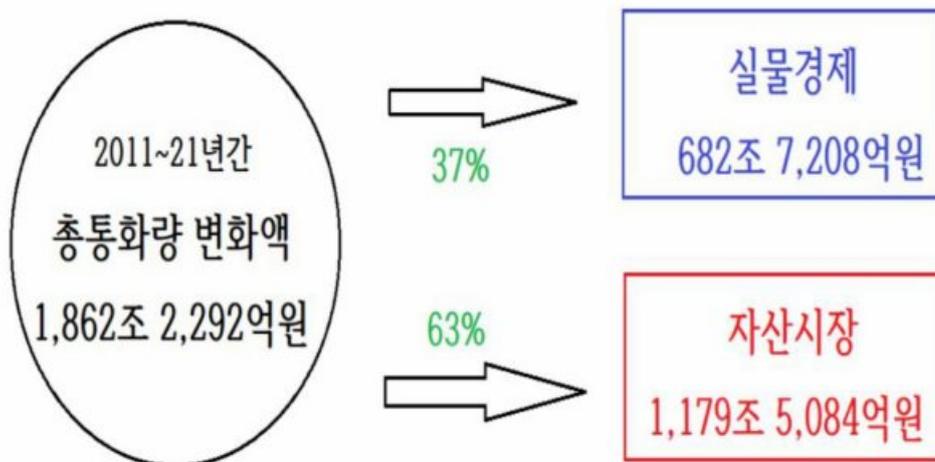
가계 순자산/가계 가처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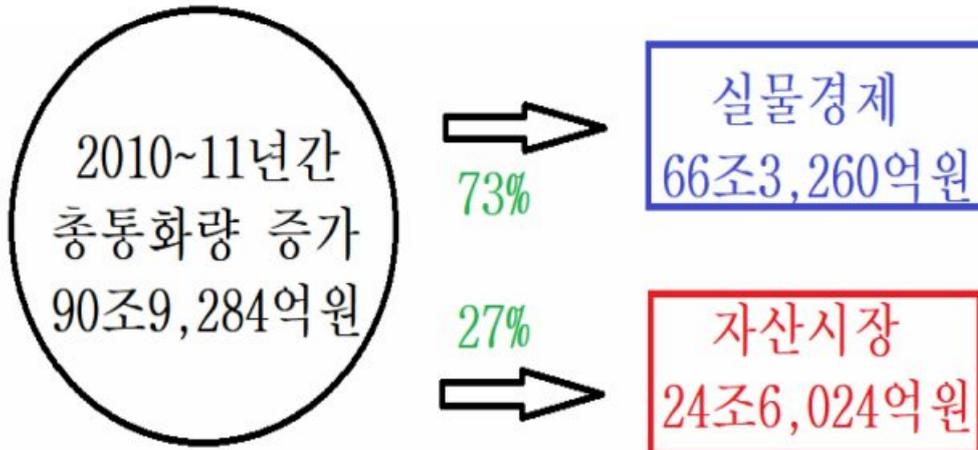
자산 중심의 경제력 축적: 오래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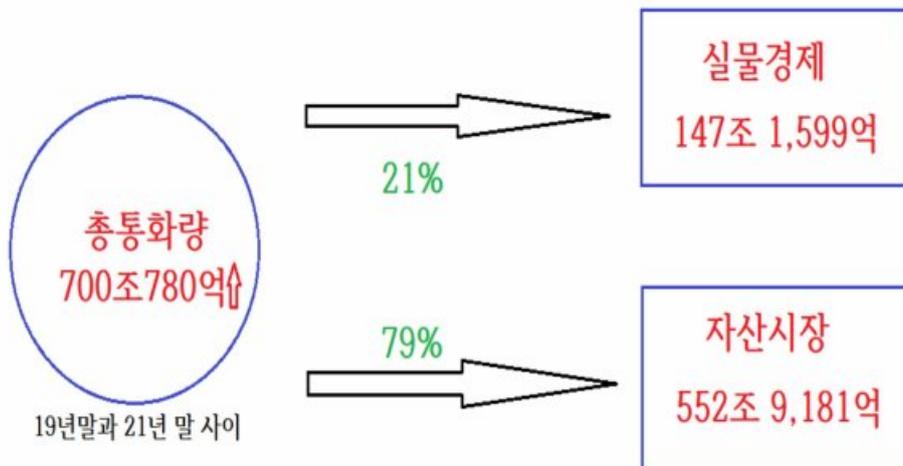
그 중심에 자산(가) 중심의 돈의 배분 지난 10년간 돈의 배분



10년 전에는



지난 2년간 돈의 배분을 보면 자산(가) 중심의 돈의 배분은 갈수록 심화



돈은 누구에게 가는가? 경제주체별 돈의 이용 기회의 변화

2001년	통화량 배분액 증가분	2021년
764조 9,793억원		3,613조 6,877억원
가계 61.5%	-468조 7,129억원	가계 48.5%
기업 24.3%	+207조 8,407억원	기업 30.1%
금융회사 8.5%	+291조 5,800억원	금융회사 16.6%

자산 불평등 구조화(세습사회)는 민주주의 실종에서 비롯

- 자본주의는 (1원1표 원칙의) 시장<경제권력>과 (1인1표 원칙의) 민주주의<정치권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만 지속 가능
- 민간부문에서 돈의 배분은 실물 영역과 금융 영역으로 구분
- <실물 영역>에서 돈의 배분은 가치 창출에 있어서 자본과 노동의 역할 차이 혹은 자본과 노동의 협상력 차이 등에 의해 결정
- <금융 영역>에서 돈의 배분은 돈의 지배력 및 금융에 대한 공동체 통제력 등에 의해 결정
- 노동의 협상력 강화와 금융에 대한 공동체 통제력 등은 민주주의 강화/약화에 의존

민주당이 보여주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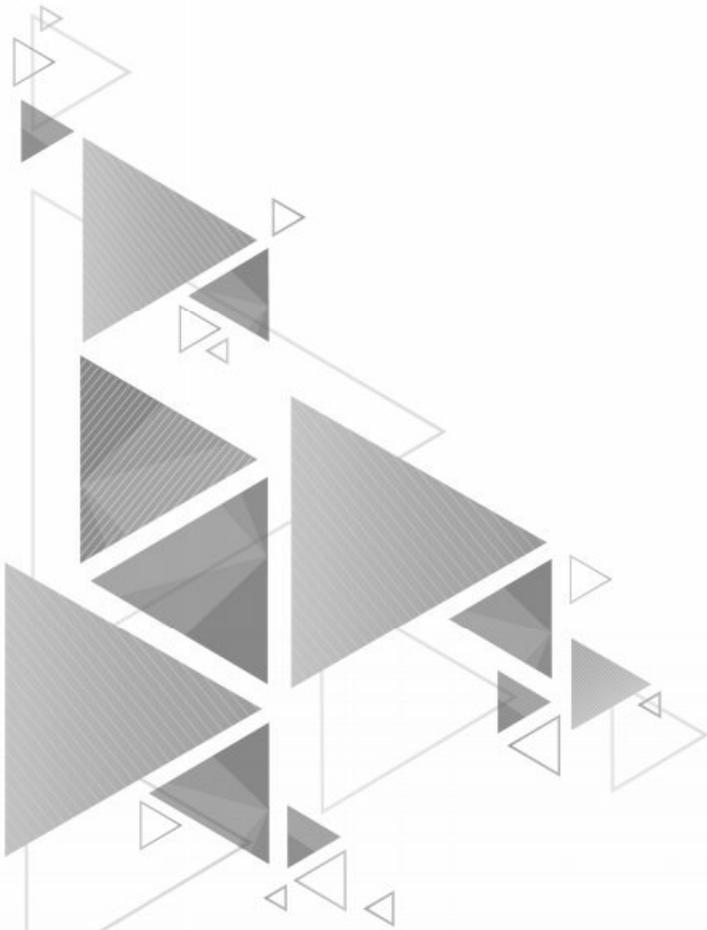
1. (단기 과제) 서민(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생계 위기 해결책
2. (중기 과제) 부동산 및 가계 부채 연착륙 대책
3. (구조 개선 과제) 자산가 공화국 해체 = 자산 축적 추구보다 땀 흘려 소득을 만들거나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가 유리하도록 설계를 재구성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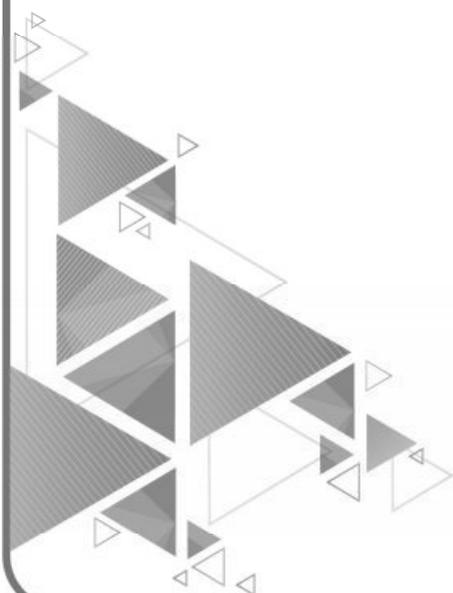
경제 정책 평가

이동주 국회의원





외교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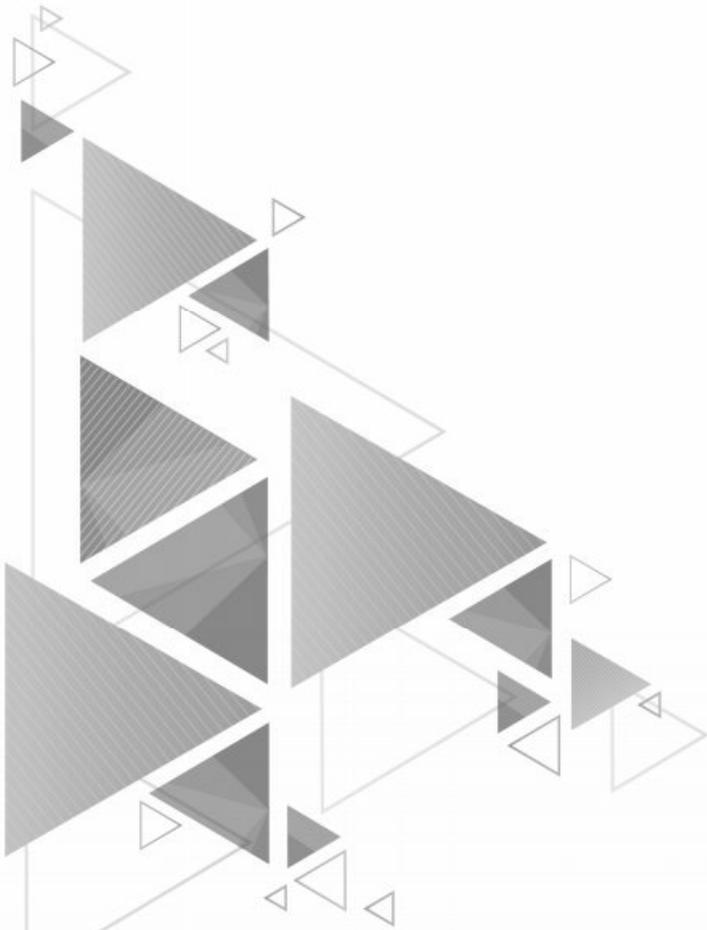




발 제

윤석열 정권 100일 외교안보 평가

김 준 형 교수(한동대)



윤석열 정권 100일 외교안보 평가

김 준 형 교수(한동대)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 문재인 지우기(ABM, Anything but Moon)는 대외정책 영역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 프레임 씌우기임: 대북 편향 및 굴욕외교, 한미동맹 파탄, 한일관계 파탄, 친중 정책 등

- 전략적 모호성 -> 전략적 명확성: 문재인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는 프레임
- ‘동맹 재건·복구론’: 문재인 정부에서 동맹을 훼손하고 파탄했다는 프레임
- 탈북어민 강제 북송 쟁점화를 통한 굴욕적 친북 외교 프레임
- 한중관계 3불 입장 쟁점화를 통한 친중 외교 프레임
- ‘강제노동 판결 관련 현금화 연기 의견서 제출’을 통한 반일 프레임과 한일관계 파탄이 문재인 정부라는 프레임

● 국가 비전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 천명

- 북한에 과도하게 집중된 외교를 벗어나 미국과 유럽, 아시아와의 외교 확대
- 영향을 받는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로 변모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



평화를 통한 안보 -> 억지를 통한 안보 군비경쟁, 선제타격론
냉전적 진영외교 한-미-일 3각 군사협력(동맹), 쿼드 가입
한미동맹 복구와 포괄적 전략동맹 한미동맹 복구와 강화, 전략동맹
선 신뢰 후 비핵화 -> 선비핵화 후 보상 대북강경책 부활, 제재 강화, 비핵개방 3000
친북반미친중반일 -> 반북친미반중친일 프레임의 역습, GSOMIA 사례의 반복 가능성

● 전략적 명확성과 가치 및 진영 외교

-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부활에 적극적 조력자가 되겠다는 것임
-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동맹?): 한미일 vs. 북·중·러의 냉전 갈등 체제 재현
- 가치 외교 동참(대미전략) vs. 실용주의(대중전략): 따로 떼어내서는 가능하지만, 합칠 때는 가능할 것인가?

■ 나토 정상회담 참여

●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이 나토 정상회담 참가

- G7 참석을 위해 외교라인을 총동원했지만, 실패(조선일보 7월 26일 자)한 후에 나토 참석을 대안으로 추진한 듯함
- 나토는 G7 정상회담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며,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적 체제로 규정한 새로운 전략 개념 채택했음
- 신냉전적 진영 구축에 참여: 미국의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인 일본, 뉴질랜드, 호주와 함께 참여

● **나토사이버방위센터(CCDCOE,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정회원 가입**

- 지난 5월, 아시아 국가로선 최초로 가입
- “나토 합동방위센터 주관의 사이버 국제훈련 ‘사이버 코얼리션’ 참관에 이어 내년부터 정식 참가 계획”

● **한국-나토 연대 제도화 발표**

- 올해 하반기 나토와의 협력 제도화 예정이라는 청와대 제1차장의 발표
- 나토가 한국과 일부 군사훈련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로즈 고테필러 전 나토 사무차장(7월 6일 VOA 인터뷰)
- 아시아의 동맹국을 유럽으로 끌어와 대러 견제를, 유럽의 나토를 아시아로 끌어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틀에 동참

■ **윤석열 정부의 ‘편중’ 또는 ‘어부바’ 외교**

윤석열 정부의 ‘전략적 명확성’ 함의

-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전략적 모호성으로 공격하는 것은 프레임이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해치지 않는 외교”**라는 분명한 전략이었으며, 이는 진영 외교를 피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 노선이었음
- 문제는 편을 정한다고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고, 더 위험해진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편을 정하고, 진영 외교로 돌진

●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역할을 계속 확대할 것을 압박 중인 상황에서 자동문 역할을 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나 전직 관료와 장성들이 공개적인 포럼이나 세미나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는 팽배함

■ 한미일 군사협력 추진

● 한-미-일 3자 ‘유사 동맹의 실질화’

-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원래 일본의 재무장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이제는 대중 봉쇄라는 미국의 전략적 필요를 위해 일본의 군사 및 경제적 동원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변화
-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3각 군사협력을 본격화한 것이 2012년부터였으며, 공교롭게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외교를 관장했던 인물이 바이든

●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와 이명박-윤석열 정부의 중첩성과 인적 구성의 유사성

-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등장
- 안보실 2인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지소미아를 추진했었고,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던 인물
- 미국은 스스로 지소미아-상호군수지원협정(ACSA)-지역 미사일방어체제의 3단계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실질화 과정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와 국내 정치 문제

-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하고,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3국의 협력에 진척이 없다는 것으로 인식
-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할 가능성 있고, 윤석열 정부가 친미와 동시에 친일적 성향으로 대일관계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기에 기대가 높아질 수 있음
- 한국의 진보 정부가 친북-친중 프레임에 걸려 고생한 것처럼, 보수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친일-친미 노선으로 갈 경우, 국내적으로 큰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 평가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의 큰 목표나 비전이 부재하고, 대부분의 외교 담론이나 정책 언급은 방법과 수단에 머무르고 있음

- 학습하지 않는 대통령, 철학이 부재한 대통령, 실언을 반복하는 대통령
- 외교·안보·통일 라인의 왜곡된 역사의식과 약소국 콤플렉스
- 펠로시 방문에 대한 대처에도 보듯이 대처 능력의 부재와 아마추어 외교
- 한미동맹이나 한일관계는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가장 중요한 가치나 목표로 삼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국가전략 기조는 ‘힘을 통한 안보’ & ‘친미 일변도’ 전략: 미·중·러가 벌이는 지정학적 충돌 국면과 맞물려 치명적 결과 초래할 수 있음

-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다름
- 대외전략 자산의 확대와 다양화가 아니라, 진영편중의 전략은 향후 5년간 우리의 역량을 지정학과 미국의 범위 안에 갇히도록 만들 우려
- 확장억제,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을 통한 외교의 안보화와 경제와 기술 등 가히 모든 영역의 군사화는 우리 국익에

● 외교 자산과 지렛대 다양화보다 편중 외교

- 한국은 친미 일변도의 외교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채 대중 및 대러 관계는 악화시켰다. 외교는 편을 정하면 운신의 폭을 좁히게 될 뿐이다, 오히려 카드를 다양화함으로써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

- 진영 편승(bandwagon) 전략을 넘어 대미 ‘어부바(Piggyback)’ 외교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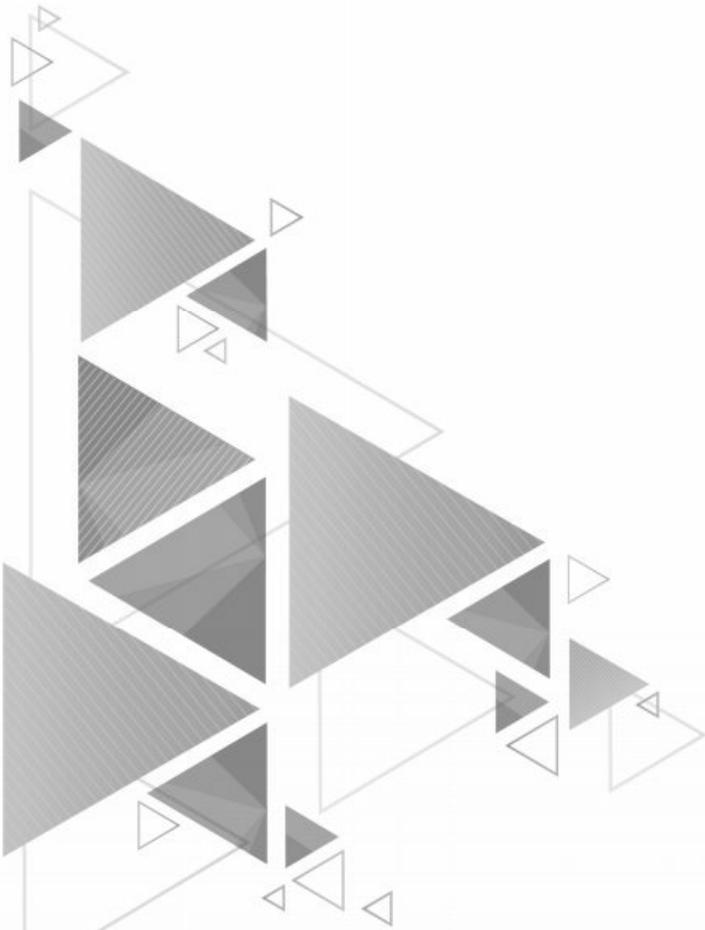
- 냉전 강화 외교로 지정학 리스크와 경제적 손실을 포함해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데, 그 속도마저 매우 빨라서 브레이크가 없음
 - 윤석열 정부의 '힘을 통한 안보' & '친미 일변도' 전략은 미·중·러가 벌이는 지정학적 충돌 국면과 맞물려 치명적 결과 초래 가능
 - 냉전적 외교로 우리 운신의 폭은 제한될 것이며, 한중관계와 한러관계를 어렵게 할 것임
 - 냉전적 외교와 군사동맹 강화, 군비경쟁, 선제타격론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중 갈등의 대리전으로 갈 수 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지정학 리스크 증가로 경제적 타격 예상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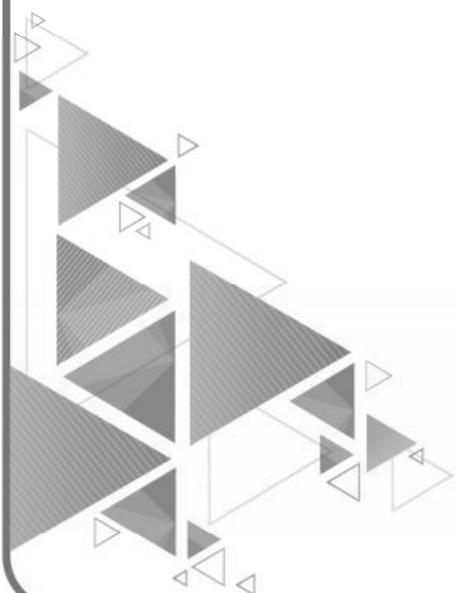
외교안보 정책 평가

김 영 배 국회의원





회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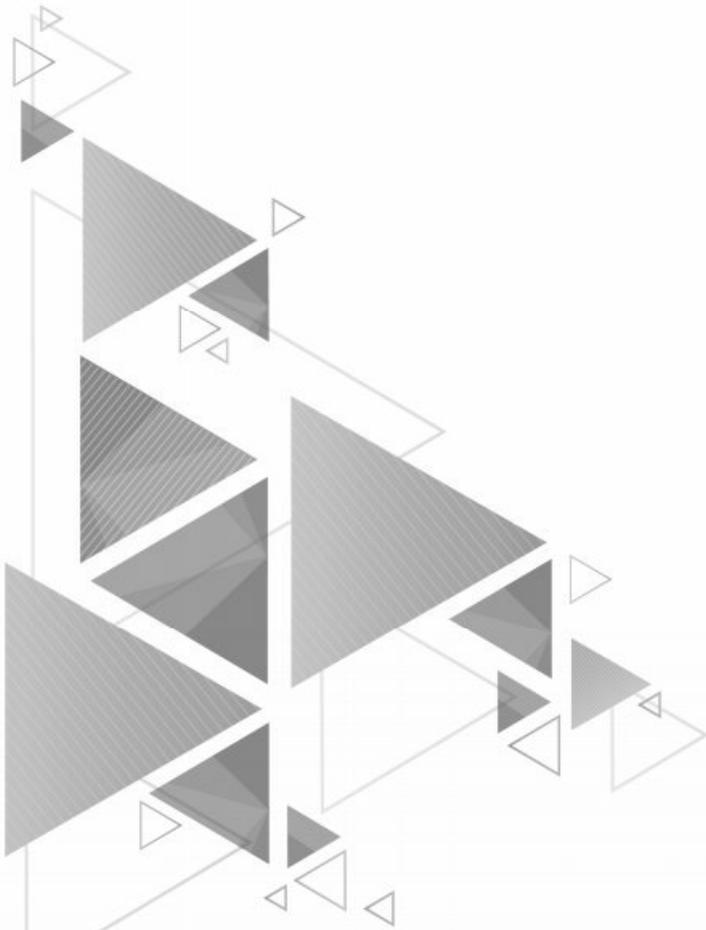




발 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진단과 제언

김 성 천 교수(한국교원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진단과 제언

김성천(한국교원대)

2022 교육감 선거의 의미

- 윤석열 정부의 정권초기 허니문과 연결이 되면서 민주당 심판론과 연결
- 진보 교육감에 대한 평가 성격을 지녔으며, 공격과 수비가 바뀌게 됨(관선 내지는 간선 체제의 중심을 잡은 세력들의 복귀 내지는 부활)
- 학습효과에 따른 진보와 보수 후보의 단일화 구도 형성
- 일반 시민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언론에서는 단일화 여부에 관심을 가졌을 뿐 정책을 깊게 다루지 않았음
- 과거의 무상급식 등 전국적으로 파괴력 있는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음
- 공약을 보면 진보와 보수의 상호 수렴 경향(돌봄, 복지, 학력, AI, IB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 국가가 함께 키우는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 AI 교육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
- 초등 전일제 교육실시 및 초등돌봄 저녁 8시까지 확대, 방과후 학교 확대
-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미래형 로스쿨 도입
- 미래지향적 대학발전 생태계 조성
-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
-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 제도 설계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등 부모찬스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
- 정시모집 비율 확대 및 대학전형 단순화
- 대학의 패스트 러닝 트랙으로 신산업 인재조기 양성 및 미래지향적 대학 발전 생태계 조성
-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주목할만한 공약

- 로스쿨 기회 확대라든지, 돌봄 기능 강화 등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으로 보임
- 유보통합에 관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음
- SW, AI 등의 키워드가 많이 보임
- 평생교육 및 지방대학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공약도 포함됨

윤석열 정부의 진단

- 교육정책에 대한 학습 및 관심, 철학이 부족한 상태로 보임. 정시확대, 고교학점제, 교육부 재구조화 등 말만 무성하였고, 인수위 검토 결과, 특별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함. 정시확대는 지방학생들과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고, 대학자율화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 고교학점제의 원안추진은 그나마 다행으로 봐야 함. 고교학점제는 정권의 산물이 아닌 교육과정 개편의 역사이고, 미래교육의 방향에서 봐야 함. 책임성, 다양성,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음. 교육부의 조직 통합 및 축소 역시 이명박 정부때 교과부로 통합한 전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교육의 특성보다는 산업의 시선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정책 스텝이 엉키고 있음
- 교육부장관, 차관, 장관 보좌관 등 비교육 전문가를 등용하였음. 교육 철학의 빈곤 내지는 몰이해, 교육무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임. 박순애 장관이 단기간에 사퇴하게 된 배경도 전문성 부족으로 설명 가능함.
- 진작 출범했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는 아직도 위원 구성 중에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윤석열 정부의 진단

- 서울대, 서울, 대기업 중심적 사고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반도체 학과 등 첨단학과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 기세인데, 이 경우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가중됨. 이는 지방대학을 살리고, 지방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과도 맞지 않음. 산업수요 예측이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특정분야에만 주목하는 것이 학문생태계의 건강성을 담보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고숙력, 중숙련, 저숙련을 고려한 로드맵과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모든 학문의 첨단화가 필요함.
- 기재부의 논리를 흡수하면서, 유초중등 예산을 고등교육으로 일부 전용할 것으로 보임.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하여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육비 3조 6천억원 가량을 고등예산으로 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대선 공약을 보면 상당한 재원마련이 필요한 공약도 있음.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및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초등 전일제 교육실시 및 초등돌봄 저녁 8시까지 확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급식 제공, 영아반 교사의 아동비율 축소,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공약 제목만 봐도 예산이 들어갈야 실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음. 교육예산을 줄이면서 어떻게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알길이 없음.

윤석열 정부의 진단

- 자사고는 존치하고, 외고는 없앨 것을 발표했으나, 왜 그래야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강한 반발이 발생하고 있음. 선발효과가 아닌 학교효과 내지는 교육과정 극대화를 해야 함.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네트워크형 고교 모델로 구축할 수도 있는데, 관련 전망이 없는 상황임.
-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이번 만5세 취학연령 하향추진이었음. 강득구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65만여명이 참여하였는데, 응답자의 94.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대선과 공약에 없었던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즉흥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었고, 유아교육계는 물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음. 결국, 교육부 장관의 사실상 경질 사태에 이르게 됨. 교육부에 자율권을 주지 않으니, 폐기선언도 하지 못한 채 애매한 발언을 하고 있음.

윤석열 정부의 진단

-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긴밀한 소통이나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추진 되면서, 퇴로없이 일방통행식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정책 추진 프로세스가 일방통행식임.
- 기존 정부에서 추진한 지역혁신사업(RIS), 고교학점제, 고교체제 개편, 돌봄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장점을 계승하고, 약점을 보완해야 함. 무조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엎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음.
- 교육부의 문제점 중 하나는 현장성 취약임. 교육부는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구성됨. 일반직은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으로 나누어짐. 교육부는 고시 출신의 요직 독점 현상이 매우 강함. 부교육감의 경우, 일반직이 독점을 하고 있음. 윤석열 정부들어, 전문직 홀대론이 심화되었고, 교육부의 현장괴리 현상이 더욱 강화됨.

결론

- 윤석열 정부가 어떤 국정철학으로 어떤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는 상과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정책과 사업이 발표되고 있음. 추진정책과 공약간 모순과 충돌발생(예: 수도권 정원 완화와 지방대학 살리기)
-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현재 매우 실망스러운 상태이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책의 절차를 밟지도 않았음. 당-정-대, 국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사전에 소통하고, 방향성을 함께 잡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소통과 참여의 키워드가 실종됨.
- 교육분야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역사와 맥락이 존재함.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매몰되면,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함. 크로스 체크하거나 반대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함. 교육 비전문가 등용으로 정책맥락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정책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는 상태.
- 정책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 보니 반도체인재양성, 5세 입학 등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 정책의 키워드와 방향이 실종됨

제언

- 5세 입학연령 하향 정책은 장관 경질에 그쳐서는 곤란함. 누가 제안을 했고, 어떤 경로로 추진되었는지를 복기해야 함. 장관만 책임지는 모양새는 곤란함
- 5세 입학연령 하향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 특히 정책 추진의 순서를 잘 살펴 제시할 필요가 있음. 5세 입학연령 하향 정책은 폐기하고, 유보통합과 유아의무교육 등의 추진을 민주당이 공론화해야 함.
-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이 이미 늦었고 구성을 빠르게 해야 함. 만5세 입학 사태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도 되지 않은 국가교육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대응함. 국회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음
-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현재까지 실패했다고 보여짐. 장관과 차관을 모두 교육 비전문가를 임용하면서 여러 문제가 노출되었으며, 조직 장악에도 실패하였음.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도 필요함

제언

- 윤석열 정부의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 기재부의 재정효율화의 논리는 고려해야할 부분이지만,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효율성과 효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수도권 중심적, 대기업 중심적 정책 추진과 지방분권, 지역활성화 정책 추진의 엇박자에 대한 비판 필요.
-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에 대응할 교육회복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인지적 학습결손 뿐만 아니라 정서, 심리, 관계, 공동체 등 복원의 영역은 다양함. 윤석열 정부는 시를 통한 학습결손 진단에 집중되어 있는데 충분히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부분이 많음
- 현장 친화적인 교육부 체제를 설계해야 함. 고시 중심의 교육부 체제로는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교육부의 소통 체계, 일하는 방식, 인사, 불필요한 규제와 지침 완화 등 대대적 개혁이 필요함. 교육부의 슬림화 역시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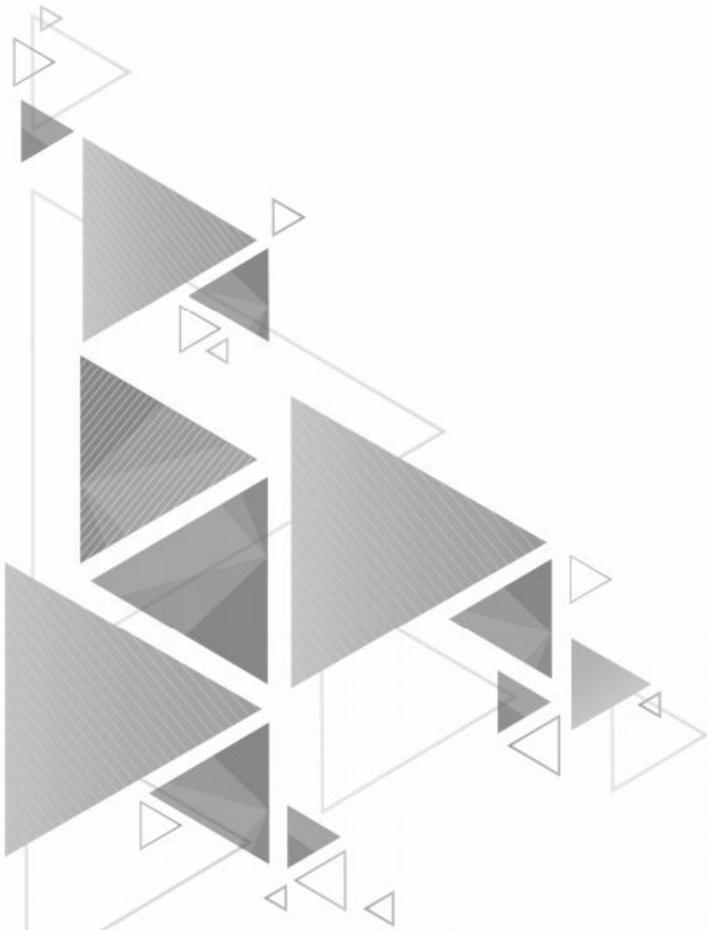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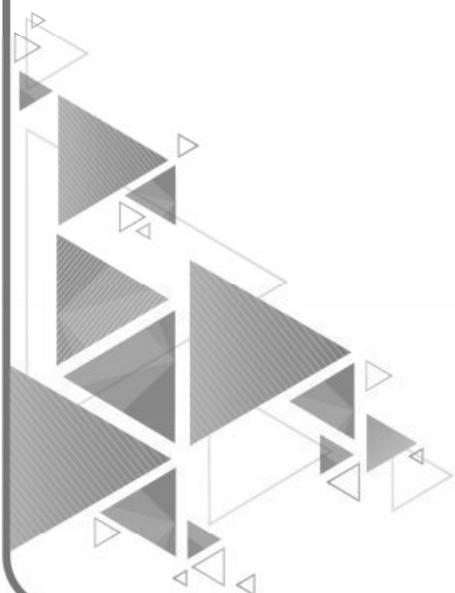
교육 정책 평가

강민정 국회의원





인사





발 제

윤석열 정부 임기초 조각단계
인사방식 특성 검토
-검찰국가 시스템 구축 측면을 중심으로-

박 용 수 전문연구원(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윤석열 정부 임기초 조각단계 인사방식 특성 검토 -검찰국가 시스템 구축 측면을 중심으로-

박 용 수 전문연구원(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I. 이 글의 문제의식

- 윤석열 정부 인사 특성 중에서 이 글은 검찰국가 시스템 구축 측면에 주목. 검찰국가 시스템 구축은 변경된 인사시스템과 임명대상(후보) 두 측면에서 확인 가능.
- 인사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드러내는 권한행사. 특히 임기초 조각단계 인사는 정책기조와 국가 거버넌스(정부조직, 국회, 시민사회 관계) 틀 제시. 대통령 인사권(해임권)은 임기보장의 대통령제에서 정책전환, 대국민사과 등과 함께 대통령의 책임성 반응 주요 수단.
-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식 권한이지만, 그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하며 (헌법 제78조), 국회의 인사청문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 대상. 윤석열 정부가 변경한 인사시스템 중에 법률 위배 가능성 큰 시행령에 기초한 부분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인사청문절차 회피 사례도 나타남.
- 검찰국가는 제왕적 대통령¹⁾을 넘어 권위주의 정부 시스템에 해당. 검찰 출신의 행정부 사정·정보기구와 법무부 중심 인사시스템 핵심기능 장악은 권위주의 시대 국가정보요원 파견을 통한 행정부처 감독, 대통령 보고 시스템 연상됨. 이것은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대통령제 공화정 시스템 위협.
- 윤석열 정부의 검찰국가화 시도는 1987년 민주화에 의한 군의 병영으로 복귀 이후 가장 직접적인 민주주의 위협. 정치적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국가화 시도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며, 역사적 맥락에서 노태우 정부의

1) 제왕적 대통령제 양상은 미국에서 주로 국가위기 상황이나 의회 우회의 편법적 권한행사로 나타남.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요인은 대통령의 억압적 권력기구의 선별적 동원, 집권당 통제, 시행령 편법적 활용 등이다. 87년 헌법에 기초한 한국 대통령제 특성인 5년 단임제와 의원내각제 요소는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 분리하는 효과를 지녀 제왕적 대통령제 요소로 보기 어려움(박용수 2016).

- 공안정국 이래 검찰개혁 미흡과 검찰 활용 국정운영의 결과. 검찰총장 시기 법무부장관 통제에 반발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법무부장관 통해 측근 검사 중심의 검찰 통제.
- 검찰국가화 차단을 위한 견제와 비판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위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검찰국가 구심점이자 출발이 아니라, 정당(국민의힘)정부로서 정체성 분명히 밝히고, 검찰국가화 조치 철회 필요. 검찰국가화 차단은 민주주의를 위한 초당적 사안이며,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검찰국가화 차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당정부화에 보다 직접적인 책임.
 -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국민의힘과 언론의 일방적 평가 경향. 문재인 정부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신뢰 하락시킨 주요 비판 대상 중 하나.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인사 행태를 부분적으로 묵인케 하는 조건으로 작용.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객관적 재평가 필요.

II. 윤석열 정부 인사방식

1. 위헌 가능성 큰 검찰국가화 인사시스템

- 검찰국가 일환으로서 인사시스템.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검사 출신 한동훈 법무부장관, 폐지된 민정수석 인사기능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대통령 비서실 인사담당(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검찰출신들로 채워짐.
- 검사출신 인사 정부요직 장악. 대통령, 대통령실(인사 관련 비서관 이외에 총무비서관, 법률비서관, 부속실장), 법무부장관, 사정(정보)기관(금융감독원장, 국정원 기조실장 및 감찰심의관), 총괄부처(법제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요직 검찰 출신 장악. 정부 각 부처별 인사에 검찰국가화 영향력 작용 가능성.
- 법률 위배 (가능성 큰) 시행령 기초 인사시스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정부조직법 위배 가능성 큼. 정부조직법 제32조 1항 법무부장관 업무범위²⁾에 인사업무 없음. 정부조직법 제34조 1항³⁾ 행정안전부장관 업무범위에 치안업무

2) 정부조직법 제32조 1항 법무부장관 업무범위: 검찰·형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3) 정부조직법 제34조 1항 행정안전부장관 업무범위: 국무회의의 사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

없음.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와 달리 한국의 대통령령은 법률에 기초해야 함. 이것은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헌법 제75조 위반 가능성 큼.

- 검찰인사: 검찰총장 임명 이전 검찰청 주요 인사 법무부장관 주도 결정. 검찰인사위원회 구성 없이 진행. 이것은 검찰청법 제34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1항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규정,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 1항 검사의 임용, 전보, 그밖에 인사 심의 규정 위반에 해당.

2. 공식화되지 않은 인사원칙

- 윤석열 정부는 인사원칙을 공식화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인사규정을 준수하는 것 같지 않음.
- 도덕성 무시. 도덕성은 전문성과 함께 공직 인사 검증의 일반화된 양대 기준. 특히 국민여론은 공직자 자격 조건으로 도덕성에 민감. 이러한 배경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고위 공직자 후보의 도덕성에 치우치는 경향. 과도한 도덕성 위주의 검증은 개선될 필요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 기준 무시는 공직 인사의 기준을 벗어나는 수준. 검찰 출신의 인사시스템은 도덕성 요인에 대한 엄격한 검증보다, 도덕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명 가능한 조건(기소 편의주의 관점)으로 활용되는 듯.
- 엽관제. 대통령비서실 비공식 채용 원리라고 사회수석비서관 발표(중앙일보 이지영 2022-07-20). 이것은 대통령 비서실 채용에 대통령 부부 그리고 집권당 원내대표 등과 사적 친밀성에 기초한 채용 다수라는 비판에 대한 대응.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비서실 공식 채용 절차와 비서실 정원 대비 비중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충분한 해명이 되기 어려움. 엽관제는 능력주의와 충돌하는 성격을 지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 둘을 도덕성 무시할 수 있는 인사 원칙으로 병행. 이와 관련된 권성동 원내대표의 청와대비서실 인사압력 자백은 검찰국가의 보호 자신감에 기초한 태도로 보여짐.
- 균형인사 배제, 지역균형이나 남녀균형 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 의사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기 인수위원회 구성 당시 여성할당제나 영호남 지역안배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조선비즈 방재혁 2022-03-13). 윤

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기 균형인사를 ‘자리 나누어먹기’ 즉 담합으로 표현하며 인사원칙에서 배제, 성평등 인사 관련 ‘구조적 차별은 없다’는 입장 표명. 그 결과 윤석열 정부 인사는 지역, 남성 편중 인사. 민주화 이후 지역구도가 지속되면서 역대 정부 인사에서 지역균형이 민감한 기준이었고, 주요 대학 출신 비중, 최근 남녀비율이 주요 기준으로 대두.

- 능력주의 원칙 기준 불분명 및 선별적 활용. 윤석열 정부는 능력주의 강조하지만, 인사과정에서 전문성 출중한 인물 물색 노력 찾기 어려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기 안철수계 인사 입각에 대해 인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 표명(경향신문 문광호 2022-04-13).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기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하는 기자회견에서 그의 영어실력과 국제업무 경험을 근거로 제시(한겨레신문 서영지·장나래 2022-04-13).
- 사적 친밀성(대통령 부부와 관계) 중시된 인사⁴⁾. 대통령비서실 비공식 임명절차의 경우 사적 친밀성이 허용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불분명. 비서실은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어떤 기준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어려움.
-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에 대한 거부감⁵⁾. 한편으로 이것이 특정 정당에게 집중되는 경향. 대선부터 취임이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 이재명 후보, 민주당에 대한 극단적 발언. 2022년 7월 5일 도어스태핑 발언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중앙일보 박태인 2022-07-10). 다른 한편 이것은 대통령의 과도한 재량 당연시 경향. 윤석열 후보 시기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 발언(강유빈 2021-10-24).

4)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시절 특유의 보스 기질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능력있는 후배 검사들을 검찰내 자신의 계파로 구축(한국경제 최진석·김진성 2022-03-11). 2022년 5월 19일까지 윤석열 정부 장차관급 이상 64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50명 총 114명 조사. 그 결과 6개 인사 코드 ‘검찰’, ‘모피아’, ‘MB’, ‘서울대’, ‘지인’, ‘남성’ 특히 서울대 고시 출신 검사와 개혁재정부 관료 출신이 다수(한겨레21 이완·손고운 2022-05-23).

5)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국민의힘 2022).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 정치행정 부문 국정목표1 “상식이 회복한 반듯한 나라”(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7; 12).

3. 기타 윤석열 정부 인사 경향

- 임기보장 공직 사퇴 압력. 전임 정부 인사에 대한 임기보장 공직 사퇴 압력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데,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공개적인 공직 사퇴 압력 공개 발언. 검찰국가 배경 없이 이해하기 어려움.
- 미국 시스템 피상적 모방 경향. 1) 대통령비서실 채용 엽관제. 20세기 미국 연방행정부 인사와 채용 제도화 고려하지 않은 발언. 2)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미국방문. 미국 연방정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겸임하지만,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은 법무부장관의 정치중립성 관련 상원의 동의 필요한 엄격한 청문절차. 3) 민정수석실 폐지와 법무부 장관에 인사기능 부여. 미국 FBI 인사검증 담당한다는 이유이나 미국은 FBI뿐 아니라 국세청, 정부윤리처 등을 동원해 교차검증후 그 결과는 백악관 법률고문이 보고받는다(한겨레신문 강희철 2022-06-13).
- 미국기자 비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성: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한 미국 기자의 여성 비중 낮은 내각에 대한 비판적 질문.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답변 "(장관)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추후 여성들에게)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 며칠후 24일 국회의장단 만난 자리에서 "제가 정치를 시작한지 얼마 안돼 시야가 좁았다",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 의사표명. 그리고 26일 교육부 장관(박순애), 보건복지부 장관(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모두 여성 임명.

III. 문재인 정부 인사 방식과 쟁점

1. 인사시스템

- 노무현 정부 인사시스템에 기초하여 이를 인사원칙에 따라 보완. 노무현 정부는 국정 운영방식의 시스템을 강조. 인사시스템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 인사 추천(인사수석)과 검증(민정수석) 라인 구분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 이를 통해 인사시스템 운영과정의 투명성, 대통령 개입을 최소화, 중앙인사위원회 인사파일 통해 국가인재DB 구축(박일환 2011).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과 국가인재DB에 기초하여 이를 보완하며 인사시스템 운용(미디어오늘 이재진 2017-06-06).

2. 인사원칙

- 균형인사: 소수·약자·편견 등으로 인한 차별 해소 목적. 2018년 2월 균형인사협의체 설치, 7월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2019년 9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참여, 2021년까지 협의체 가동. 이를 통해 여성, 장애인, 지역 인재 등 균형인사 진전.
- 공정성 외: 2017년 7월 공정성 제고 위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발표, 2018년 8월 공정채용 가이드북 발간. 7·9급 공채 시험제도에서 의무화 실시. 이외에 개방형 직위 민간인재 영입, 전문직 공무원 도입 및 확대, 직무와 성과 중심 보상 확대, 특히 전문분야(탄소중립, 의학, 재난안전) 공직후보자 발굴 및 (여성, 지방, 이공계) 인재DB 확충, 중대비위 징계 강화 조치 실시(청와대 2022, 371-384).

3. 인사논란

- 문재인 정부 인사논란은 주로 국회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대두. 검토가 필요한 것은 청문보고서 미채택 비중이 큰 원인과 대통령의 임명 강행. 그 원인은 행정부의 인사검증 부실 또는 국회의 정치양극화로 대별. 후보자의 결정적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채 청문보고서 미채택 경우 대통령의 임명에 대한 평가.

〈김대중-문재인 정부 기간 정부별 국회 인사청문 결과〉

	구분	해당공직	본회의 표결			청문보고서		합계
			가결	부결	철회	채택	미채택	
김대중 정부	행정부	국무총리	2	2	0			4
	사법부	대법관	7	0	0			7
	독립기관	헌법재판소장	1	0	0			1
		헌법재판관	2	0	0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0	0			2
	총계		14	2	0			16

	구분	해당공직	본회의 표결			청문보고서		합계
			가결	부결	철회	채택	미채택	
노무현 정부	행정부	국무총리	4	0	0	-	-	4
		국무위원	-	-	-	25	3	28
		기관장	-	-	-	15	0	15
		감사원장	2	1	0	-	-	3
	사법부	대법원장	1	0	0	-	-	1
		대법관	11	0	0	-	-	11
	독립기관	헌법재판소장	1	0	1	-	-	2
		헌법재판관	8	0	0	-	-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0	0	8	0	9
	총계		28	1	1	48	3	81
이명박 정부	구분	해당공직	본회의 표결			청문보고서		합계
			가결	부결	철회	채택	미채택	
	행정부	국무총리	3	0	1	-	-	4
		국무위원	-	-	-	40	14	54
		기관장	-	-	-	12	6	18
		감사원장	2	0	1	-	-	3
	사법부	대법원장	1	0	0	-	-	1
		대법관	13	0	1	-	-	14
	독립기관	헌법재판소장	0	0	1	-	-	1
		헌법재판관	3	1	0	4	0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0	0	7	1	10	
총계		24	1	4	63	21	113	
박근혜 정부	구분	해당공직	본회의 표결			청문보고서		합계
			가결	부결	철회	채택	미채택	
	행정부	국무총리	3	0	1	-	-	4
		국무위원	-	-	-	37	9	46
		기관장	-	-	-	20	4	24
		감사원장	1	0	0	-	-	1
	사법부	대법관	5	0	0	-	-	5
	독립기관	헌법재판소장	1	0	0	-	-	1
		헌법재판관	0	0	0	3	0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0	0	7	0	10
총계		13	0	1	67	13	94	

	구분	해당공직	본회의 표결			청문보고서		합계
			가결	부결	철회	채택	미채택	
문재인 정부	행정부	국무총리	2	0	0	-	-	2
		국무위원	-	-	-	39	17	56
		기관장	-	-	-	16	8	24
		감사원장	1	0	0	1	-	2
	사법부	대법원장	1	0	0	-	-	1
		대법관	10	0	0	-	-	10
	독립기관	헌법재판소장	2	1	0	-	-	3
		헌법재판관	3	0	0	1	5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0	0	5	1	7
	총계		20	1	0	62	31	114

출처: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홈페이지 <https://isgs.yonsei.ac.kr/isgs/board/data.do?mode=view&articleNo=13786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전진영(2021)과 2021년 3월 이후 언론기사 참조 작성)

-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임명에 대한 비판 많았음(전진영 2021). 그런데 위 표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는 이전 정부에 비해 국회의 청문보고서 미채택 비중이 높았고⁶⁾, 청문보고서 미채택 사례 중에 결정적 결격사유(소위 결정적 한방) 없는 경우가 많았음⁷⁾.
- 결정적 결격사유 제기되지 못한 청문보고서 미채택 사례 중 대통령의 인명 철회 사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시행된 노무현 정부 이래로 찾기 어려움. 이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의 재량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부담. 예를 들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되었음.
- 문재인 정부 인사원칙의 경직성(5대; 7대 인사원칙: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인사원칙 각 항목의 타당성 분명하지만, 절대적 무결점 기준 적용은 근거 부실한 의혹 제기만으로 정쟁과 과잉 검증 초래. 중대성, 반복성, 현재성 등 논란 사안의 비교평가 가능한 조건 보완 필요. 또한 도덕성 이외의 다른 기준 포함한 종합적 판단 필요.

6) 문재인 정부 시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대상 62명 중에서 미채택이 31개였다. 국회는 지명자 중에서 50%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 비율은 박근혜 정부 시기 총 67명 지명자 중에서 13명 미채택에 비해 높음.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청문보고서 대상 지명자 총 63명 중에서 21명이 미채택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 1/3, 박근혜 정부 시기 1/5에 비해 문재인 정부 시기 1/2 수준의 국회 청문보고서 미채택 비중이 큼.

7) 국회 인사청문회 내용 측면 검토 필요. 문재인 정부 임기초 2017년 6월 김이수 헌재소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대 의견(국회 뒤 재판관의 헌재소장은 삼권분립 훼손, 1년 3개월 헌재소장 임명은 파행, 소수의견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되지 않았다)의 근거는 미흡(경향신문 이범준 2017-06-11). 조국 법무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결정적 한방'을 제기하지 못함(중앙일보 이민정 2019-09-06).

- 인사 청문회 기간 후보자와 가족 개인정보 공개와 수사 및 사법처리 압박.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가족(부인, 자녀, 형제, 부모 등)까지 개인정보 공개. 인사청문회 기간 검찰의 후보자 부인 기소는 대통령 인사권 및 국회 인사청문권 침해.

4. 쟁점 부처 및 공공기관 인사

- 대통령 비서실 채용 과정 공식 절차 근거. 인터넷에서 2022년 8월 10일 현재 “2018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확인 가능. 그 내용에는 근거법령(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 범죄, 파면, 해임 관련 사항), 직위별 직무기술서(경력 또는 학위),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절차, 직무수행 계획서 등이 포함. 이러한 절차가 채용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작동되었음이 2022년 6월 30일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됨. 2018년 당시 대통령비서실 채용에 응모했던 사람이 합격되었으나, 형사사건 및 직무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받은 전력 유무 확인을 사전질문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이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그것이 적법한 결정이었음을 판결한 것이다(리걸타임즈 김덕성 2022-08-03).
- 검찰인사.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갈등 관계의 검찰 인사 사례 검토 필요. 추미애 장관의 검찰인사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 확인 방식이나 절차를 둘러싼 신경전 있었음. 2020년 1월, 8월, 2021년 1월 세차례 검찰인사. 당시 상황적 맥락에서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와 조국 전장관 가족 표적 과잉수사 등에 대한 견제 성격. 다음 인용 내용은 2020년 8월 검찰인사 당시 추미애 장관의 인사 원칙. "특정 학맥이나 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 "첫째 검찰개혁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둘째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내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셋째 출신 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넷째 우수여성 검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승진 기회를 준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 것"(당시 추미애 페이스북).
- 공공기관장 인사. 소위 낙하산 인사 논란 검토 필요. 문재인 정부 5년간 금융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63명이라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주장. 그 주장의 판단기준은 친정부여

당 성향(서울신문 김승훈 2022-02-08). 친정부여당 성향은 원칙, 절차, 기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은 아님. 정치성향을 친정부여당, 반정부여당으로 대별한다면 전체 비중에서 친정부여당 성향이 절반 이상인지 검토 필요. 해당 기사에는 몇 명중 63명이라는 내용 없음. 2021년 11월 기업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의 조사에 근거한 기사(조선일보 신은진 2021-11-10)에 의하면 임기중 공공기관 임원 10중 3명이 낙하산인사이며, 이 비중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해 10%포인트 증가라는 주장. 이것도 친정부성향 인사가 3/10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부터 추진한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포함한 채용단계별 공공성 확보방안은 2018년 8월 가이드북으로 발간되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적용(청와대 2022, 377).

IV. 대안 모색

1. 국회의 검찰국가화 차단

- 검찰국가 위험성 시민 인식 공유. 공안정국의 제도화로서 검찰국가의 위험성. 공수처가 실질적인 검찰수사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국가는 내부갈등 없다면 검찰과 집권세력을 사실상 치외법권화. 검찰국가 배경에서 인사실패나 부적절 해명 반복.
- 국회의 감시와 견제. 검사출신 주요 공직자 최대한 임명 배제. 임명 이후 감시, 질의, 국정조사, 해임건의 혹은 탄핵 준비. 법무부 인사검증 기능과 행안부 경찰국 존재와 조치의 불법 혹은 위헌 가능성 검토 및 이들 조치의 문제점 집중 감시.
-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정리. 정당성 여부 판단 근거로서 원칙, 기준, 필요성, 오해 정리. 보수진영의 검찰국가화 지지나 묵인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에 대한 정치 보복 성격 강해보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필요한 반박 근거 제시.
- 검찰국가화 차단은 초당적 사안이나, 국민의힘은 집권당이자 주요 의원들 성향 고려할 때 검찰국가화에 편승할 가능성 큼. 국회의 검찰국가화 차단은 민주당 몫.

2. 입법(법률 제개정) 검토 사안

- 법률 위반 시행령에 대한 실질적 입법통제와 사법통제 가능한 입법.
- 국회 인사청문 대상⁸⁾ 확대. 처장, 청장, 원장, 주요 공공기관장, 차관 수준까지 확대.
- 검사 퇴임 일정 기간 이후 공직 임용 및 행정부처 검사 파견 제한.
-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자료 부실 제출과 국회의원의 후보자 개인정보 공개 관련 규제 강화.
- 국회 인사청문 대상 이외에 부처 및 공공기관 채용 관련 절차 검증 체계화와 언론 보도 검증 및 대응 필요.

3. 정부 인사 원칙 체계화

- 공직에 부합하는 능력은 특정 부문의 전문성으로 충족되기 어렵고, 개인의 사적 도덕성으로 공적 책임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현실적 제약 조건 하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 사례로 활용할 수 있지만, 기존의 전문성과 도덕성 기준을 재정리하여 인사 기준 체계화 필요.
- 인사 관련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인사원칙으로 공공관리론의 합법성과 효율성, 신행정론의 사회적 형평성과 대응성, 신공공관리론의 효율성과 경쟁력 및 성과, 후기 신공공관리론의 공공성, 민주성, 책임성(서원석·이덕로 2021, 298) 등 제시됨. 이 글은 이들 내용을 공적 책임성으로 단순화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조직 리더십으로 전문성과 도덕성 체계화 제안.
- 공적 책임성: 정부는 사적 기구와 달리 법령에 기초한 공적 성격. 고위공직 후보자의 정책 결정과 집행 담당자로서 공적 책임성 중요. 공직 경험이나 공적 책임성 질문 통해 인식 검증. 내용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초한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그리고 정책대상자 및 여론에 대한 반응성 포함. 공적 책임성 기준은 후보자의 사적 도덕성 평가에 좀더 엄격한 평가조건이 될 수 있음.

8) 국회인사청문 대상: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국회임명동의 대상: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의 후보자/ 국회선출 대상: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 직책 리더십: 고위공직 후보자의 전문성은 주로 해당 직책의 리더십을 통해 발휘. 해당 부처 관료에 포획되지 않으면서 해당 부처의 목적에 기여하는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 방식. 이에 필요한 판단과 설득력. 현재 시점에서 사안별 우선순위, 위기관리, 미래비전, 조직문화 혁신 등에 대한 인식과 준비 수준 검증.

4. 국회 인사청문 운영방식

-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필수. 다른 사안과 연계 배제. 야당의 인사청문회 거부는 국회의 대통령 인사권 견제 기회 포기이자, 국민이 대통령 인사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차단.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담당 국회의원들은 질의를 줄이고 후보자에게 최대한 충분한 답변 보장. 후보자의 답변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며, 답변 내용이 충실할 수록 판단근거가 많아진다는 의미.

참고문헌

- 국민의힘. 2022.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정책공약집.
- 김판석·정홍원·홍길표. 2008. “고위직 공무원 인사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 모색: 노무현 정부의 관련제도 변화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7(1), 109-146.
- 대통령비서실장. 2018. “2018년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대통령비서실 공고 제2018-2호.
- 박용수. 2016.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한국정치연구] 25(2), 27-55.
- 박일환. 2011. “참여정부 인사정책”. [진보와 권력: 참여정부 정책총서 정부운영편]. 노무현재단.
- 서원석·이덕로.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무원 인사제도의 변화 전망”.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0(1), 293-309.
- 이재근. 2022.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의 눈높이와 인사검증”. [윤석열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 인사혁신처. 2022. [인사혁신 우수사례 모음집].
- 임재진. 2017. “공공기관 임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정치적 임용의 현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2), 171-199.
- 전진영. 2022. “역대 정부 제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와 쟁점”. 이슈와 논점. 제1958호. 국회입법조사처.
- _____. 2021.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 역대 정부별 비교와 함의] 현안분석 제190호, 국회입법조사처.
- 전충렬·김판석. 2014. “미국 연방정부의 고위직 임용체계와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2), 1-37.
- 조태준·김상우. 2021.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성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5(1), 173-197.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청와대. 2022. [문재인정부 국정백서 개혁1-제14권 겸손한 권력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도약]. 문화체육관광부.

- 신문기사

- 강유빈. “윤석열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 아내는 적극적이지 않아””. [한국일보] 2021-10-24.
- 강희철. “미국식 인사검증에 ‘한동훈 법무부’는 없다”. [한겨레신문] 2022-06-13.
- 김덕성. “‘경찰 조사’ 숨긴 대통령비서실 채용시험 합격 취소 적법”. [리얼타임즈] 2022-08-03.
- 김승훈. “문재인 정부 5년간 금융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63명”. [서울신문] 2022-02-08.
- 김혜연. “추미애 "윤석열, '당신이 뭘 알아? 내 식구 까라'고 했다””. [주간현대] 2017-07-15.
- 문광호. “윤석열, 안철수계 입각 묻자 “인사원칙 부합하지 않으면 안 돼””. [경향신문] 2022-04-13.
- 박태인. ““文정부 훌륭한 사람봤나” 尹에 문혔다...도어스테핑의 역설”. [중앙일보] 2022-07-10
- 서영지·장나래. “윤석열 “영어실력 유창”-한동훈 “검찰은 나쁜 놈 잘 잡으면 돼””. [한겨레신문] 2022-04-13.
- 손지은·이하영. “선거 관여 안 한다더니... 김건희 “尹캠프 와라, 잘하면 1억””. [서울신문] 2022-01-17.
- 손현수·강재구·박수지. “수사에 정보까지 들어진 한동훈 법무장관...‘소통령’ 현실화”. [한겨레신문] 2022-05-25.
- 송태화. ““김건희와 카톡 332번’ 왜...한동훈 “尹에 보고하려던 것””. [국민일보] 2022-05-09.
- 신은진. “낙하산 인사 없던 文 정부... 공공 기관 ‘캠코더’ 10%p 늘었다”. [조선일보] 2021-11-10.
- 양은경. “윤석열, 인사 전날 "만나자" 전화... 추미애 "인사안 靑에 있다" 거절”. [조선일보] 2020-01-11.
- 이민정. “靑 "조국 청문회, 결정적 한 방 없었다"...'임명' 기류 불변”. [중앙일보] 2019-09-06.
- 이범준. “김이수 현재소장 후보자, 야당의 ‘불가론 3대 근거’→모두 사실 아님”. [경향신문] 2017-06-11
- 이완·손고운. “윤석열 정부 ‘인사 코드’ 6가지...114명 이력 심층분석”. [한겨레21] :2022-05-23

이재진. “문재인표 ‘파격’ 인사 가능했던 이유 있다”. [미디어오늘] 2017-06-06.

이지영. “대통령실 "사적채용 아닌 엽관제, 능력 인정받아 채용된것"”. [중앙일보] 2022-07-20.

정태욱. “윤석열 정부의 인사청문회 패싱, 특히 교육부 장관 임명의 문제”. [뉴스핌] 2022-0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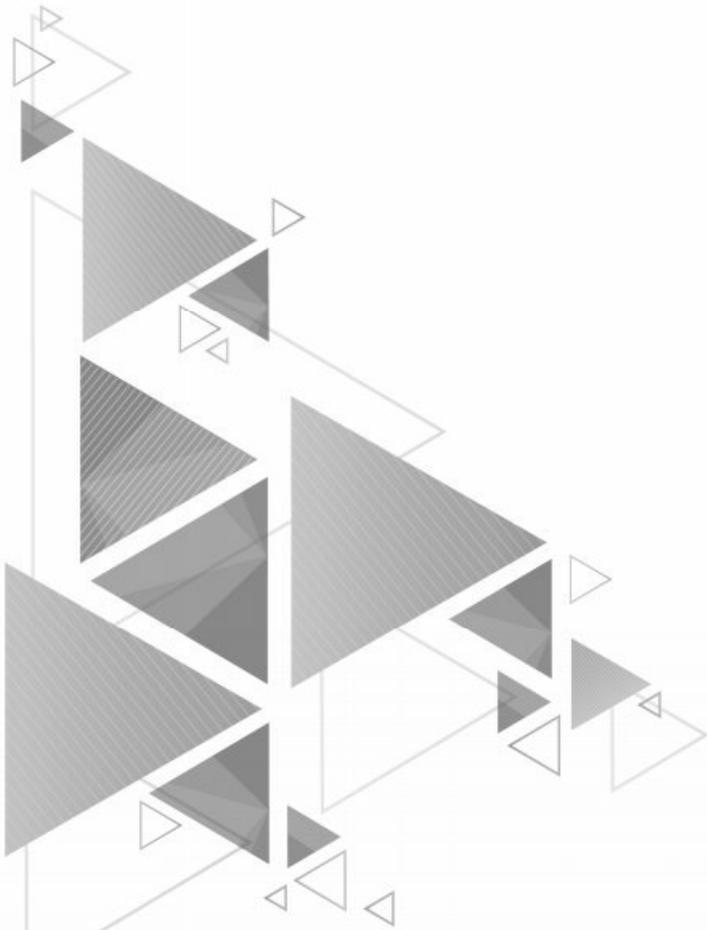
최진석·김진성. “윤석열 용인술’ 핵심은 능력…한번 믿으면 끝까지 쓴다”. [한국경제] 2022-03-11.



토론

인사 분야 평가

오영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